大韓言論
Korea Journalists Society
SINCE 1977 www.kjclub.or.kr
月刊 4 2015년 4월 1일 제 349호

社團法人 大韓言論人會
대표전화 | 02)732-4797~8
Fax 02)730-1270
E-mail | kjc1405@hanmail.net

주요활동
· 공정언론지향·언론문화창달
· 언론관계 출판·연구발표
· 언론상 시상
· 언론인 복지 후생사업

從北세력의 '남조선 혁명' 막아라

大韓言論 2015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남시욱
·본회 상담역
·전 문화일보 사장
·세종대 석좌교수

美대사 피습사건
북한전략과 관련있어

저항권 명분
국가파괴 기도

'뻐꾸기새끼' 가려내는
언론 역할 다해야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사건은 다행히도 피해자의 생명에는 이상이 없이 얼굴 부상만으로 끝이 났다. 피해자는 곧 건강을 회복했고, 한미동맹 역시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더욱 공고하게 되었다.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범인 김기종의 범행 동기도 현재 수사당국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다.

북한 당국 공개적 생명위협 공세 계속

현재 가장 궁금한 사실은 이 사건이 과연 정신이상자의 돌출사건인지,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암살미수사건인지, 그리고 이 사건과 북한 당국의 이례적인 테러위협과의 직·간접적인 관련 여부이다. 북측은 자신들의 관련성을 전면부인하고 있지만 그 동안 리퍼트 대사에 대한 그들의 공개적인 신변위협은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 측에 대해 의혹을 품게 하기에 충분하도록 그 도가 지나쳤었다.

북한 당국은 작년 연말부터 김정은 정권의 핵과 경제 병진노선을 비판한 리퍼트의 발언을 트집 잡아 그들의 선전매체를 통해 대사 개인에 대한 연이은 공개적인 생명위협 공세를 계속했다. 북측은 드디어 지난 2월 22일에는 "리퍼트는 혀가 제 목을 감는다는 말을 새겨야 할 것"이라고 까지 극언을 했다. 북측은 사건 발생일인 지난 3월 5일 새벽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승냥이에게 말로 할 때는 이미 지나갔음" "미친 광증에 걸린 적들의 명줄을 완전히 끊어놓아야 함"이라는 문구를 그들의 인터넷매체에 게재했다.

따라서 수사당국이 밝혀야 할 문제의 핵심은 이 사건의 배후가 있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범행 경위가 어떻든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 그것은 최소한 국내 종북세력, 특히 그 중에서도 평화적 통일운동을 한다는 민간단체 책임자가 어느 시점에서 테러분자로 돌변한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1961년 9월 김일성이 지시한 남한의 혁명은 남한 자신이 수행하도록 하려는 '남조선혁명노선', 다시 말하면 '남한의 베트남화' 전략과 관련이 있다. 물론 이 전략은 과거 50년 동안 성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정권 내부의 시대착오적인 강경파들은 2010년부터 북핵을 새로운 무기로 해서 '주체사상을 유일이념으로 하는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통해 남조선해방을 관철하려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미국과의 담판을 통한 한반도평화협정 체결과 미군철수, 그리고 고려연방제 달성을 통한 궁극적인 한미동맹 와해로 이 전략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 같은 북한의 노선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국내 종북세력은 유사시 저항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폭력혁명을 감행하려 한다. 김기종이 이번에 리퍼트를 공격한 것은 그들의 중간 공격목표인 한미동맹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현재 국내 종북세력의 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 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종북세력의 문제를 북한이 노리는 '남조선해방'의 전위세력이라는 각도에서 보지 않으면 안된다.

작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을 때 많은 국민들은 이제야 비로소 나라가 올바른 궤도에 진입하는가 하고 큰 희망을 걸기 시작했다. 그러나 리퍼트 피습사건은 이같은 국민들의 기대심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재를 뿌린 사태였다. 현재 한국이 당면한 안보 위기는 첫째 북한 핵이라는 외부적 군사적 위험요소, 둘째 북한 정권의 거침없는 대남 무력공격 위협과 이로 인해 국내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국민들의 만성적인 아노미상태에 가까운 불안심리와 무력감, 그리고 셋째 활개 치는 국내 종북세력이라는 내부문제이다. 역사상 최초의 미국대사 습격사건인 김기종의 범행은 이들 세 가지 국가적 위기요소들 모두를 내포하고 있다.

역대 정부—국회의원들이 김기종 지원

따라서 리퍼트사건이 남긴 국가적 과제는 종북세력의 문제로 귀결된다. 종북세력 문제가 제기되면 으레 여당은 구호만 요란했던 '발본색원'을 외쳤고 야당은 '종북타령 비난'과 '이념공세' 주장으로 맞섰다. 그러나 이번 김기종 사건에서 나타난 바는 역대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그에게 국고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회의장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주었다. 야당 일부 의원은 김기종에게 개인적으로 후원금도 건넸다고 한다. 김기종이 2010년에 강연장에서 주한일본대사에게 돌을 던져 대사관 여성외교관의 손에 상처를 입혔는데도 사법부는 그에게 집행유예라는 온정을 베풀었다. 우리 사회가 김기종의 활동을 도와준 셈이 아닌가.

종북세력의 본질은 국가파괴 세력이라는 데 있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 결정서 말미에 두 재판관의 흥미로운 보충의견을 첨부했다. 이 의견서는 종북세력에 대해 "대역(大逆) 행위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관의 문장치고는 드물게 보는 우국충정이 담긴 문학적인 수사이기는 하나 '남조선혁명'의 전위세력에 대한 추상같은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거리이다.

이 보충의견서의 또 다른 흥미로운 대목은 뱁새가 둥지에서 뻐꾸기가 몰래 낳은 알을 정성껏 품어 부화시켰더니 알에서 나온 뻐꾸기 새끼가 뱁새의 알과 새끼들 모두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어 아래로 떨어뜨렸다는 속담을 소개한 점이다. 언론의 역할은 우선 이 나라의 지도자들 중 누가 뱁새이고 누가 뻐꾸기인지를 가려내는데 있다.

우리 언론인들은 이 보충의견서에 다음과 같은 한 구절이 있는 것을 살펴보았으면 한다. 즉, "아주 작은 싹을 보고도 사태의 흐름을 알고, 사태의 실마리를 보고 그 결과를 알아야 한다(見微以知朋 見端以知末)"라는 옛 성현의 가르침에서 통찰력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한 다음 "(이 같은 능력 없이) 그들의 가면과 참모습을 혼동하고 오도하는 광장의 중우(衆愚), 기회주의적인 지식인·언론인, 사이비 진보주의자, 인기영합 정치인 등과 같은, 레닌이 말하는 '쓸모 있는 바보들'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고바우 만평

김성환 (본회 회우)

미국 대사인 모양이야

大韓言論 2015 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從北 바이러스확산 차단 시급

특별기고

이동복
·신아시아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5대 국회의원
·북한 민주화포럼대표

'햇볕정책'이후 南北교류 무대는 좌파 잔치판 돼

美대사 테러범 통일부 교육 강사 경력 정부 · 여당 猛省 필요

지난 3월5일 서울 한 복판에서 자칭 '통일운동가' 김기종(55)이 마크 리퍼트 (Mark Lippert) 주한 미국 대사에게 자행한 테러 행위가 우리에게 던져준 가장 큰 충격은 지금 대한민국이, '종북(從北)' 사상에 오염된 과대망상증(誇大妄想症·Megalomania) 환자들이 수없이 양산(量産)되어 거리를 활보(闊步)하고 있어서, 이들이 언제 어디에서 불측(不測)의 범행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사회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는 것이다. 김기종의 범행이 그가 지녔던 '종북' 사상의 산물이라는 것은 범행 당시 범행 현장과 그 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언행이 입증해 준다. "오리처럼 보이고, 오리처럼 헤엄치고, 오리처럼 울면 그것은 십중팔구(十中八九) 오리"라는 서양(西洋) 격언(格言)이 있다. 김기종이 바로 '오리'인 것이다.

北의 남조선혁명 기본 명제는 反美

그 동안 진행되어 온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의하면 이번 테러의 범인 김기종은 '단독범'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경찰은 김의 범행 동기를 "평소 갖고 있던 반미(反美) 성향이 미 대사를 공격하는 극단적 행위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범행 동기인 김기종의 '반미'가 보통 '반미'가 아니라 북한이 1945년 해방에 따른 남북분단 이후 70년간 시종일관 고수해 온 기본 대남 적화혁명 전략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노선의 기본명제인 '반미'라는 사실에 있다. 북한이 말하는 '반미'는 다음과 같은 '김일성(金日成)의 전략사상'에 집약되어 있다. "미제(美帝)의 남조선 강점과 그의 식민지 통치는 남조선인민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며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 장애"이기 때문에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세력을 몰아내며 그의 식민지 통치를 분쇄하지 않고는 남조선인민들이 식민지 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통일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의 범행이 북한과 결코 무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찰의 수사 결과도 이 점을 간과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김기종의 몇 가지 '종북' 활동으로 의심되는 과거의 행적(行蹟)과 범행 후 조사 과정에서의 김의 발언 사례들을 예거하면서 김이 "북한 동조 성향이 이번 범행으로 이어진 심증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경찰의 수사 결과는 피상적(皮相的)이다. 간과(看過)한 것인지 아니면 착안(着眼)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김기종이 과거 김대중(金大中)·노무현(盧武鉉) 정권 시대의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의 대북 유화정책(宥和政策)이 대한민국 사회에 양산해 놓은 악성 '종북(從北)' 바이러스에 감염(感染)된 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특정하여 지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소위 '햇볕정책'을 옹호했던 남쪽의 '친북·좌파' 세력들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산물(産物)인 《6·15 남북공동선언》의 주요 성과로 남북간 인적 왕래의 확대를 거론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하나의 허구(虛構)였다. 2003년 이명박(李明博) 정권 등장 이전의 좌파 정권 시기 남북 간에는 '6·15'와 '8·15' 등을 계기로 '민족'을 명분삼아 다양한 축전(祝典) 행사와 금강산·개성 관광, 그리고 경제교류가 봇물 터진 것처럼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도합 16만명에 가까운 인적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훤전(喧傳)되었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대부분의 남북간 인적 교류와 왕래는 남쪽 사회의 주류(主流)인 '보수·우파' 세력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제된 가운데 북한과 북한에 동조하는 남한 내의 '좌파' 세력만이 참가하는 '잔치판'이 되어 '북의 주문대로 남이 길들여지는' '통일전선'의 무대(舞臺)를 제공하는 데 그쳤었다는 사실은 흔히 간과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한때 문제의 《6·15 선언》의 결과로 "남조선은 보수 우익이 변방으로 밀려나고 친북 좌파가 주류가 되는 사회로 변모했다"고 환호(歡呼)하기도 했었다. 우리는 그 동안 남북간에 이루어졌던 소위 '인적 왕래'의 이 같은 치명적인 맹점(盲點)을 이번의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 대한 테러 사건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범인 김기종은 좌파 정권 기간 중 무려 여덟 차례에 걸쳐서 특정 남북 행사를 이용하여 북한을 다녀 온 자임이 드러났다. 소위 '6·15 선언'의 이행을 통하여 이루어진 남북간의 인적 왕래는 이를 통해 김기종과 같이 은원(恩怨)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은인(恩人)을 상대로 원수(怨讐)로 오판하여 테러를 불사하는 종북(從北) 과대망상증 환자들을 양산해 왔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오늘의 시대로

이 홍 우(본보 편집위원)

〈채널A TV 방영〉

종북 숙주 시비 여당도 일말의 책임

이번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 대한 테러 사건 범인 김기종의 신상에 관하여 또 하나의 충격적 사실이 있다. 그가 노무현 정권 때였던 2005년부터 4년간 통일부가 임명하는 통일교육위원으로 학생·시민들을 상대로 소위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였다는 사실이다. 김기종의 '강의'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종북 좀비'들이 양성되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조차 끔찍하다. 정부는 시급하게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되어서 통일부와 국방부 및 행정자치부와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등 관련 정부 부처들과 시민단체들이 관리하고 있는 '통일교육' 강사들의 이념적 성향과 적성에 대한 전수(全數) 검사를 실시하여 이들 가운데서 김기종의 '아류(亞流)'들을 가려내서 도태(淘汰)시키는 일을 서두르는 것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여·야간 '종북 숙주(宿主)' 시비가 가열되고 있다. 시비의 불질을 하는 쪽은 여당인 새누리당 쪽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종북 세력과의 단절'을 요구하는 정치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종북 숙주' 시비에서 새누리당이라고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번에 김기종의 범행 장소를 제공한 '민주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대통령의 측근인사가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사실상의 '관변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종북' 활동과 무관하지 않은 많은 단체와 인사들을 망라하고 있다. 김기종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뿐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의 실질적인 집행기구여야 할 '통일준비위원회'는 사실상 이제는 시효(時效)가 지난 '햇볕정책' 전도사(傳道師)들이 똬리를 틀고 안방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의 박근혜 정부도 여전히 '종북' 성향의 단체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좌파' 정권 때의 관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래서야 앞으로 제2, 제3의 김기종이 더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상하지 않을 수 없다. 차제에 새정치연합보다도 정부·여당의 맹성(猛省)이 먼저 요구된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이 헛말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에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키기 위한 '집안 대청소'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안보와 국가보훈' 광복70주년 대토론회

본회 6·25 참전언론인회, 4월 16일 개최

대한언론인회 6·25참전언론인회(회장 박기병)는 오는 4월 16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광복70주년 한반도 안보와 국가보훈' 주제로 대토론회를 갖는다. 서울지방보훈청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국가보훈분야 전문가 유영옥 박사(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경기대 명예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박명서 통일미래사회연구소 이사장, 문명호 본회 주필, 이도형 전 한국논단 발행인, 지용우 본회 논설고문, 최현수 국민일보 국방전문기자가 토론자로 참가한다.

北韓發테러 방지법 만들때다

大韓言論 2015 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여영무
·본회 논설위원
·남북전략 연구소장
국제법학 박사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국가 안보뿐 아니라
개인 안보도 지켜야

사이버테러 방지법
북한인권법
범죄단체 해산법
함께 제정할 필요

지금 전세계는 핵무기와 테러리즘, 기후변화, 유행성 전염병(epidemic), 경제적 양극화문제 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현실적 위험은 무고한 인명을 집단학살하는 테러리즘이다. 중동의 'IS'(이슬람극단주의 집단)의 잇따른 참수와 화형테러는 전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전세계 테러범죄의 90%이상이 이슬람발(發)이며 이들 테러는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등 중동에 집중돼 있다. 이슬람극단주의자들의 테러는 테러단체 이름을 달리해 아프리카와 유럽, 미국 그리고 중국 등 아시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위그르 자치주의 이슬람 분리주의자들에 의한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문기관(Mapledroft)통계에 따르면 2013년 7월~2014년 7월까지 12개월동안 테러사망자 18,668명은 이전 6개월간 사망자 14,443명에 비해 30% 증가했다. 나날이 폭증하는 글로벌 테러리즘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IS테러 못지않은 국제범죄행위

국내의 경우 절대다수가 북한발이거나 종북테러이다. 3월 5일 발생한 우리마당 대표 김기종(55)의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에 대한 살인기도 테러도 종북테러이다. 북한은 1997년 2월 15일밤 테러전문요원 최순호를 밀파, 김정일 처조카 이한영씨를 경기 분당아파트 복도에서 사살했으며 2010년 4월에는 황장엽씨에게 암살테러를 가하려던 2명의 남파간첩들이 사전 체포됐다. 북한은 또 2011년 10월 탈북자 안모로 하여금 대북전단을 날리는 박상학씨에게 독침테러를 하게하려다 수사기관에 사전 적발되기도 했다. 그들은 KAL기폭파와 아웅산 묘소폭파 등 동족에 대한 우회집단학살테러도 서슴지 않았다.

세계화시대 테러리즘은 대부분 국제테러범죄다. 북한발 테러도 휴전선을 넘어온 테러이기 때문에 국제테러범주에 속한다. 테러리즘은 ①정부기관과 제3자에게 의사를 강요하기 위해 사람을 살상, 납치, 인질, 고문하거나 민간항공기의 공중납치와 파괴 또는 건물과 재산의 폭파, 파괴 등 폭력적일 것 ②이런 폭력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동기를 가지고 무고한 제3자나 개별적 군인 또는 민간인을 겨냥하며 조직적, 고의적이며 공포심을 유발할 것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김기종은 범행당일 수사기관에 압송될 때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이산가족상봉도 안되었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했다. 북한도 연일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연습이라면서 무력도발을 위협했다. 북한의 2인자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2월 13일 북한군 충성 결의 대회에서 "미 제국주의에 가장 무자비하고 무서운 불벼락을 내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올해를 '통일대전의 해'로 정한 김정은은 최근 미 본토를 대상으로 핵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말하는 등 10월까지 전쟁 준비를 마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도됐다. 리퍼트 대사에 대한 김기종의 테러도 북한지령 여부와 관계없이 평소 그의 반미감정과 친북성향, 치밀한 사전계획 등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북한의 이런 정치, 군사적동기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등은 이번 테러직전 "리퍼트의 명줄을 끊어야(3월1일)"라고 선동했으며 칼부림테러직후 안중근 의사의 의거에 빗대며 "정의의 칼세례, 남녘 민심의 반영"이라고 김기종의 테러리즘을 적극 찬양 미화했다. 북한은 겉으로는 테러를 반대한다면서도 실제로는 이처럼 반미종북테러를 고무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핵무기를 가진 전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의 이런 테러찬양 태도나 과거의 대남전력들은 북한의 전천후 대남테러범의(犯意)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거기다 개방적인 우리환경은 빈번한 국제교류와 다문화가정 등 잠재적 테러유발요인들이 숱하게 쌓여있다.

종북 해방구 인터넷공간 다스려야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선전매체들과 개인블로그 등 인터넷공간이 종북주의자들의 해방구가 됨으로써 종북테러의 빈발여지를 더욱 넓혀주고 있다. 공안당국은 최소 수만명에 달하는 종북세력이 통일전선부의 반미테러 '공개지령문'을 전파, 학습하면서 투쟁방침으로 삼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는 '인권'등을 핑계로 북한발 대남테러억제를 위한 법적장치 마련을 더 이상 미룰 여유가 없다.

9·11테러후 세계 각국은 앞다퉈 테러방지법을 제정했다. 미국은 애국법을 제정 감청, 체포, 검열권한을 강화했고 영국은 영장없이 구금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국가들은 대부분 테러방지법을 제정했다. 우리나라 경우 테러 관련규칙은 달랑 1982년의 '대통령 훈령'뿐이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의 이병석, 서상기, 송영근 의원 등이 발의한 3개 테러관계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국정원의 인권침해, 군병력동원 등의 위헌소지 등을 들어 야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엉거주춤하고 있다.

안보는 국가안보와 인간안보(개인안보·Human Security)가 상호보완적으로 병행돼야 한다. 정부는 국방부 중심의 국가안보뿐 아니라 무고한 개인이 테러로부터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단위 개별적 '인간안보'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테러는 국가안보 그자체이기도 하다. 김정은의 잇따른 핵전쟁호언과 KAL기 폭파처럼 반인륜적 집단테러를 서슴지 않는 북한의 호전성은 'IS'같은 제3의 테러단체를 이용한 핵테러도 감행할 수 있다고 가정케 한다. 유비무환의 법적장치만이 북의 대남테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물리적 테러보다 더 무서운 위력을 가진 사이버테러 방지법도 서둘러야 한다.

테러방지법(이병석의원등 제안)은 국정원장이 테러징후시 상임위원장에게 보고 후 필요 조치를 취하며 필요시 군동원 조항을 두어 위헌시비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국정원이 사법경찰권을 갖게 될 경우, 권한을 남용해 인권침해를 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할 문제다. 테러대응센터를 대통령소속의 국가안보실에 두고 별도 대응팀이 국정원등 관계부처의 테러관련업무를 조정, 지시, 집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안보와 개인안보를 같은 차원에서 안보실이 일목요연하게 통제한다는데도 의미가 있다.

테러방지법은 기구를 신설하기보다 정부부처 등 기존기구를 상호 연결해 활용하고 조직의 명령계통도 단순화해야 한다. 여론수렴도 중요하다. 북한발테러는 북한의 인권유린체제와 종북반국가 이적단체들의 한국내 이적범죄가 숙주역할을 하기 때문에 '북한인권법'과 '범죄단체해산법'도 조속히 제정돼야 할 긴급과제다. 안보는 억지와 사전예방으로서 절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돼서는 안된다. 정치권이 테러방지법을 서둘지 않는것은 대남테러나 무력도발을 김정은의 자비심에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

'100자 발언대'

한국의 巨人도 顯彰하자

아시아의 巨人 떠나다-리콴유 싱가포르 初代총리 타계 소식을 대서특필한 우리 언론들.

無에서 有를 창조한 나라 한국을 6번이나 방한했고 아울러 가난한 漁村 싱가포르를 세계적인 强小國으로 만든 巨人은 그의 유언 또한 巨人답다. "내 집, 기념관 만들지 말고 허물라".

박근혜 대통령이 장례식에 참석하기도 한 리콴유의 생전 모습이 우리 신문에 비춰진 것처럼 한국의 巨人들도 우리 스스로 顯彰했으면…

이상호(본회 이사)

짐(朕)들의 나라

설치다 잠이 들었습니다. 마로니에 숲이 멋지고 멋쟁이가 말을 타고 달립니다. 루이 14세라네요. "짐(朕)이 국가다"라며 뻐기다가 마누라와 같이 단두대에서 죽은…

놀라 깼고 누운 채 생각하니 한반도에도 루이 닮은 태양왕이 많네요. 해처럼 빛나고 싶은 사람들. 자기 멋대로 하거나 자기가 절대선이란 사람들입니다. 김정은 말고도 말입니다.

사드 훈수 두는 국회의원은 대통령 같고, 국회의원은 황제 같은 모습으로 비칩니다.

대통령 비슷하고 왕을 닮은 사람들이 수천 수 만명 되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결도 내게 맞지 않으면 아니라는 이들은 모두 내 법(法)의 나라 사람들입니다. 모두들 내 멋대로 해야 한다는 태양왕이고 독재자이며 절대군주들입니다.

짐과 내 법의 나라 사람들은 비슷한 종(種)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인부터 분수를 지켜야 합니다. 삼권분립이 날아가면 그게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 됩니다.

호천웅(편집위원)

국회의원 겸직 장관 '위장전입' 아닌지…

청문회 3종 세트-'다운 계약서', '위장전입', '논문표절',/'송구스럽다.', '사과한다.' '앞으로 처신 잘 하겠다.'

물으나 마나, 들으나 마나 뻔한 청문회 쇼.

내년 봄 총선을 코 앞에 둔 국회의원 겸직 장관은 10개월짜리 다운계약서 쓰고 장관실로 위장전입한 것은 아닌지?

그 아까운 솜씨 그냥 버릴 수는 없겠지요.

정창기(편집위원)

大韓言論 2015 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韓-美동맹 더 확고히 해야한다

특별기고

김희상
·예비역 육군중장
·정치학 박사
·한국 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리퍼트대사 피습
혈맹에 상처안돼 다행

사드 관련 문제등
美 자존심 손상 안되게
주권국가로서
中國 설득 필요

지난 3월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 소식에 모두가 경악했다. '이제 한·미동맹은?' 하는 불안감은 더 컸다. 양국의 정부 당국자들은 '오늘의 한·미동맹은 더 할 수 없이 튼튼하다'며 이번 사태로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그런 표현은 한미관계가 최악이었다는 노무현 정부 때도 당국자들이 입에 달고 다니던 말이다. 그러지 않아도 미국이 말로는 한중접근이 한·미동맹에도 보완적이라면서도 '한국이 중국 눈치를 너무 본다.'며 불편해하고 있는 때가 아닌가? 오죽하면 2013년 12월 바이든 부통령의 "베팅 잘하라"는 사실상의 경고에 이어 오바마 대통령도 작년 4월 '한국안보와 번영의 기초는 미국'이라며 직접 바이든을 거들고 나섰다. 지난 2월 말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의 도발적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 잘해줘야" 소리 점점 높아져

사실 최근 우리사회에는 중국바람이 매우 거세다. '연미화중(聯美和中)'에다 '연미연중(聯美聯中)'해야 한다며 중국에 더 잘해주라고 채근하고 심지어 극히 일부지만 아예 한·미동맹을 한중관계로 대체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따지고 보면 이해 할 수도 있는 일일 것이다. 중국을 빼 놓고는 우리 경제를 말 할 수가 없고 한반도 자유통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한·미동맹 못지않게 한·중관계도 중요하고, 그래서 미·중을 다 함께 잘 아우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좀 진중(鎭重)해야 한다.

물론 수 십 년 확고히 조중동맹 위에 서 있던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도 많이 달라지고 있음은 틀림없는 듯하다. 그러나 그 본심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우리 핵심국익에 대한 태도로 가늠해 볼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북한 핵에 대해서는 여전히 빛바랜 6자회담이나 찾고 있고, 자유통일에 대해서는 아예 명확한 입장표명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은 여전히 중국의 핵심이익'이라면서 '남북을 양손에 올려놓고 즐겨온 중국이 기존정책을 완전히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금도 중국은 압도적으로 합의된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 러시아와 함께 외로운 반대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이 촉발한 사드(THAAD) 논란은 그 적나라한 증거다. 기본적으로 방어무기 아닌가? 기술적으로도 중국에 별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것을 중국이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중국은 '한국이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협박까지 하고 있다. 중국의 시각이 어떠한지 새삼 깨우쳐 준다. '중국이 조중동맹 차원에서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일방적 핵 우위와 위협이 중국의 국익에 유리하다고 보지 않는 한 있기 어려운 행태'라는 분석도 그 하나다.

"중국의 발전을 위해 더 넓은 '안전 공간'을 확보하고 싶어 한다"는 왕융(王勇) 베이징대 교수의 발언은 더욱 고약하다. 중국을 잘 아는 릴리(James Lilley) 전 미 대사는 2007년 1월 미 의회에서 '중국 지도층이 북한의 반 정도를 자기 땅으로 생각하고 동북공정과 백두산 주변의 대군이 그와 무관치 않다'는 증언을 했는데, 실제로 1950년대 중국 교과서에는 한반도가 되찾아야 할 실지(失地)로 표시 되어 있었다. 또 중화사상의 국제질서는 본래 서구적 횡적질서(橫的秩序)가 아니라 중국을 중심으로 한 패권적 종적(縱的)질서다. 그래서 천안함 사태 때 중국이 미 항모의 서해 진입을 한사코 막고 나섰을 때 우리는 매우 불쾌했었다. 서해를 중국의 내해(內海) 화하려 든 것이고 서해가 중국의 내해가 되면 한반도 중국화의 디딤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시진핑의 미소에도 과거 '조공(朝貢)외교관계 복원'의 꿈이 서려있다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만약 정말로 그리되는 날이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원래 나라가 죽고 사는 안보문제는 항상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상정하되,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하는 법이다. 그런 차원에서는 아무리 미·중을 함께 아울러야 한다고 해도 아직은 중국을 적절히 억제 할 수 있는 역량과 태세를 갖추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닐까?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 힘, 그것은 현실적으로 미국밖에 없다.

아무리 한·중관계가 중요해도 어디까지나 '연미(聯美)', 곧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의 기저(基底)요 한·중관계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사실 이제는 싫든 좋든 G2 중국의 공감이나 적어도 묵시적 이해, 정 안되면 효과적 억제라도 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의 미래를 설계하기가 어렵게 되어있지만, 그렇다고 만에 하나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당장 국가 생존이 위협 받을 것임은 물론 오히려 중국의 '업신여김'을 자초하기 십상인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연미화중, 연미연중의 길도 함께 찾아야겠지만, '화중(和中)·연중(聯中)'이 무조건 고개를 잘 숙인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때로는 긴장의 증폭(增幅)도 감내하는 의연한 용기로 상대의 존중을 받아내야 한다. 그래야 소위 외교가 가능해 지는 것이고 특히 상대의 경멸을 사는 일은 금기(禁忌) 중의 금기다. 지금 우리는 어쩌다가 중국을 저리 오만하게 만들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튼튼한 한·미동맹' 불변의 상수 아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로서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전제로, 중국에는 좀 의연(毅然)하게 대처해서 '대한민국'을 주권국가로서 존중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그 위에 중국의 사회적 이성에 국익으로 설득해서 중국의 이해와 마음을 얻는 연미득중(聯美得中)의 묘리가 오늘 대중정책의 정도(正道)요 미중을 함께 아우르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 아닐까? 이래저래 우리에게는 여전히 '튼튼한 한·미동맹', 특히 한반도 자유통일을 내다보는 오늘은 바로 그런 큰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재정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여기서 분명 한 것은 '튼튼한 한·미동맹'이 결코 불변의 상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잘 가꾸어야 한다는 말이다. 더욱이 오늘의 미국은 외교, 경제, 군사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인데 반해, 통일을 비롯해서 우리가 한·미동맹에 기대하는 동맹적 소요는 너무 크다. 그런데도 햇볕정책 10년간 한·미동맹을 할퀴고 파놓은 깊은 상처는 아직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이런저런 의구심과 불신은 거의 변함이 없어 보인다. 이번 리퍼트 대사 피습사태도 치명상은 아니었으니 그런 다행이 없고, 담대하고 여유로운 대처로 한미 양국사회에 감동을 준 미 해군 특수부대 출신의 리퍼트가 대사였음도 행운이었다. 그래도 이미 미국에는 혈맹 한국에서 미국대사가 피습당했다는 불행한 충격은 상당기간 계속 남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한·미동맹이 되게 하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훨씬 더 진지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할 것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지난번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 및 서울 주둔' 결정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사실 연합사는 당장은 물론 통일과 통일 후의 가까운 미래까지도 더 할 수 없이 소중한 전략적 안보 자산이다. 그러나 그 때문에 다행스럽다는 것이 아니다. '연합사 없어도 한·미동맹만 튼튼하면 된다.'는 갓 똑똑이들이 적지 않지만 연합사야 말로 한미양국을 얽어매는 핵심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연합사 없는 한·미동맹은 한 장의 종이쪽지에 불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반도 자유통일을 내다보는 전략적 큰 차원에서 한·미가 함께 총체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지금처럼 연합사로 연결된 '구조적인 동맹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최선을 다해 그 내실(內實)을 다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자면 우리도 좀 달라져야 한다. 예컨대 지금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은 GDP 4-5%를 국방비로 투자하는데 한국은 2.7%도 흔들린다.'고 섭섭해하고 '주한미군은 감축하지 말라면서 한국군은 줄인다.'고 어이없어 한다. 적어도 이런 일은 없어야 미국도 연합사 체제의 강화에 공감하고 동참 할 것 아닌가?

더 중요한 것도 있다. 한국도 미국의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너무 기피하면 안 된다. '동맹관계'란 기본적으로 '공통의 이익과 이해를 위한 상호지원 관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할 것 다 해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월남전 이후 미국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후에는 흔쾌하게 한국을 동맹군으로 거론하지도 않았다. 작년, 어느 미 정보관계자는 우리 연구소에서 '이제 유사시 한국이 동맹의 사명을 다해 줄 것으로 믿는 미국인은 나를 포함해서 많지 않다'고 말했다. 더욱이 군사동맹관계란 '상호간의 깊은 이해와 우의가 있어야 그 기능이 사는 특별한 관계'다. 그런데 우리는 주한미군의 교통사고 하나에도 수많은 국민이 촛불을 켜들거나 미국 대통령의 사과까지 받아내고야 끝을 내면서도, 주한미군의 훈련장까지 찾아가 성조기를 불태우고 광우병이니 뭐니 걸핏하면 미국을 할퀴고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전략동맹국'으로서의 신뢰와 동맹적 우의가 어떻게 변함없이 뜨거울 수 있겠는가? 앞으로도 계속 이래서는 건강한 한·미동맹을 이어갈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日本의 집단적 자위권 신중한 대응 필요

한국에 있어 미·중을 함께 아우르는 노력은 불가피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불필요한 의구심을 사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그런데도 2012년 12월 미 국가정보위원회(NIC) 보고서 '글로벌트렌드 2030'에서는 '한반도가 통일되면 미국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들 것이고 그것이 미래 동북아 정세의 변수'라고 내다보았다. 중국이 문제 삼는다고 한국이 전전긍긍하는 '사드' 논란에서는 더 큰 충격을 받은 듯하다. 하긴 15만여 젊은 피로 중국의 침략에서 한국을 구해낸 미국이 충격을 받지 않았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일게다.

더 이상 이런 오해를 버려두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투명성과 주도권이다. 흔히 비스마르크 외교가 해법일 듯 말하지만 지금은 그런 비밀 외교가 가능한 시대가 아니다. 때마침 우리는 과거 노태우 정부시절, 냉전시대 말의 그 예민한 시점에, 공산권의 문을 여는 파격적 정책을 수행하면서도 미국과도 돈독한 우의를 유지했던 특별한 경험이 있다. 비스마르크 외교가 아니라, 투명하게

5면으로 이어집니다.

從北에 司法관용 베풀지 말라

大韓言論 2015 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특별기고

홍정기
·문화일보 논설위원

美대사 테러범
전과 4범인데도
執猶등 가벼운 처벌

公安사범 재판
온정주의 판결
더이상 없어야

3월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테러범 김기종과 붉은 카네이션 - 어울릴 것 같잖은 조합이다. 카네이션 붉은 꽃에서 현장 테이블의 핏방울이나 그가 걸치고 있던 붉으죽죽한 한복을 떠올린다면 리퍼트 대사도 서운해할지 모른다. 스스로를 '미국 오하이오주 촌사람'이라고 해왔고, 그 주의 상징화가 붉은 카네이션이라니 아무래도 그럴밖에.

닷새 지나 리퍼트 대사가 퇴원하는 날,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한국 국민의 사려깊은 위로에 대사가 큰 감명을 받았다"고 전하는 정남식 연세의료원장의 따듯한 한마디와 함께 보도된 것은 또 전혀 딴판의 조합이었다. '대사·의원 폭행해도 벌금·집행유예… 미국에선 대사 암살 모의에 25년 형(刑)'이라고 대비시키면서 "테러범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요지의 관련 기사였다.

實刑으로 일벌백계 했더라면 재범 막았을 것

그렇다. 김기종은 전과(前科)를 추려 4범이다. 그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罪)와 벌(罰)'은 2010년 7월 7일, 3년 임기 마무리를 3주 남짓 앞둔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일본대사를 향해 지름 10cm 크기의 콘크리트 조각을 던져 폭행한 죄로 선고받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었다. 그 전에 1993년 2월과 2002년 2월의 폭행 사건으로 입건돼 각각 선고유예, 벌금 50만원 형을 치렀었다. 그러니까 별 것 아닌 폭행 사건 두 번을 치러본 뒤 외교사절을 폭행해 '국교(國交)에 관한 죄'까지 나아갔던 것이다.

형법 제260조 1항의 단순 폭행죄 법정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지만 형법 제108조 1항 외교사절 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서 벌금형으로 대체할 수도 없는 중죄, 중형이다. 2010년 그 사건 재판부가 "개전의 정도 없다"고 질책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한 판결' 아니라, 점점 심상찮아지는 폭행의 죄질을 감안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했더라면 지난해 2월 또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문 뒤 또 다시 외교관 폭행을 저지를 엄두까진 차마 못 내었을 것이다.

폭행-폭행-외교관 폭행에 이어 다시 폭행-외교관 폭행을 순환시킨 김기종의 범행 역정이 한심하지만 그와 그의 동류(同類)가 이적성(利敵性)으로 엮이기까지 '온정주의 사법(司法)'의 암약 몫이 작지 않다는 지적도 이젠 그리 새삼스럽지 않다. 대법원이 2012년 이적단체로 규정한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의 김수남 대표의장은 사건 발발 사흘만인 3월 8일 지켜보라는 듯 서울 종로경찰서를 방문해 "(김기종이) 옳은 일을 했으니 면회하고 격려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 후에도 시도 때도 없이 "김기종의 행동이 미국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줄 것" 운운해왔다. 그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도 또 듣고 참아내야만 하는 게 이 땅의 안보형사법 그 초라한 민낯이다. 김수남이 역시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의 고문을 지냈으니, 의분(義憤)조차 그만큼 옅어지고 또 엷어지는 것인가.

또 그렇다. 사법부 일각은 준법보다는 범법자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을 무슨 미덕쯤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공안(公安) 사건의 경우 엄정한 재판을 주문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식으로 관용을 앞세우는 것을 무슨 관행처럼 굳혀오다시피 했다. 결코 관용할 수 없는 범죄에까지 관용하는 것은 적나라한 불의(不義) 이외에 다른 무엇일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그들끼리의 사법밀어(司法密語)가 '민-다-개-포'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성-다양성-개방성-포용력을 '민, 다, 개, 포' 네 음절로 줄여 공안사범을 의제 재판해왔다.

김기종이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김일성은 20세기 민족지도자라고 생각한다. 남한에는 그만한 지도자가 없다"고 했다지만, 그리고 그를 도와온 황상현 변호사는 9일 "경찰이 맥락을 거세하고 피의자의 진술 가운데 구미에 맞는 일부만을 공개한다"며 마뜩잖아 했다지만 경찰 아니라 법정에서 그보다 더 심한 말을 해도 그리 걱정할 것 없다. 실제로 2011년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한 형사법정에서 장년의 국가보안사범이 법정에서 "북한은 가장 이상적인 나라다. 우리나라의 정통성은 북한에 있다. 선군사상은 만능의 보검" 운운했지만 재판부가 내린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그렇게 선처한 사유는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과 성숙도에 비춰 과거와 달리 위헌이 크지 않다"는 것이었다. '민-다-개-포'의 변형 버전이다. 그해 서울 광화문 일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장에서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했던 60대도 실형을 살지 않았다. 그러긴커녕 그 경찰서장이 시위대에 의해 집회시위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지 않은 사실을 차라리 다행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 이 땅의 법치주의의 서글픈 한 단면이다.

大法서 바로잡은 회문산 빨치산 추모 전야제 사건

회문산의 빨치산 추모 전야제 사건은 그나마 대법원에 의해 1-2심이 바로 잡힌 드문 예에 속한다. 일본 대사에 대한 김기종의 폭행 사건이 일어나기 5개월 전인 2010년 2월, 전주지법 한 재판부가 5년 앞서 2005년 5월28일 중학생 제자와 학부모 180여명을 인솔해 전남 순창 회문산에서 열린 빨치산 추모 전야제에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김형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은 없다"는 것이었고, 이 판단은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나 대법원 2부는 1-2심의 그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 2013년 3월 28일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서 재판을 제대로 다시 하라고 되돌려보냈다.

김기종의 '죄와 벌'이 확정되기 전에 올 한 해는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의 올 한 해 역점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면 그 주위 동색(同色)의 준동이 좀은 뜸해질지 모를 일이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지난 1월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의 모두(冒頭)가 '헌법가치 수호를 통한 국가정체성 확립'이다. 종북 세력을 뿌리뽑겠다는 말이다. 법무부는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이적단체 해산 등 제재방안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어쩌랴, 종북 세력을 뿌리뽑는 것은 사법부의 책임 영역이고, 이적단체 해산법 제정은 국회 소관인 것을.

사법부 일각이 온정주의 구태를 털어내지 못한 채 '민-다-개-포'를 뒤적거리는 한, 국회가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의 2010년 9월, 2012년 7월 및 2013년 5월 세 차례 이적단체 해산법 발의를 내팽개쳐놓고 있는 한, 법무부의 헌법가치 수호론도 갈수록 공허해질 것이다. 그 허공에서 김기종류, 그러니까 이적성이 확인된 61개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1만9000여 명의 야유가 점점 더 거칠어질 것이다.

4면에서 이어집니다.

하면서도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 보면서 한걸음 앞서 나가 주변국 관계에서의 어젠다를 선점, 주도해 나감으로써 이루어 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약소국이 무슨 주도권? 싶을 테지만 약소국일수록 그래야 살아남고 미래를 열어 갈 수도 있는 법이다.

비슷한 차원에서 한·일관계도 좀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지금 다른 것은 몰라도 미국이 동북아 안보에 꼭 필요 하다고 하고, 영국과 호주 동남아 각국도 환영하고 있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한국이 그것도 하필 중국과 함께 문제 삼는 것을 의아스럽게 보고 있다. 최근 워싱턴에 번지고 있다는 이른바 '한국 피로증'도 그 때문이라고 한다. 그게 아니라도 일본은 싫든 좋든 자유통일의 전략적 자산으로 만들어야지 우리 발목을 잡으려 들게 해서는 안 되는 나라다. 또 정부와는 싸워도 국민을 적(敵)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은 외교의 ABC다.

그런데도 우리사회가 갈수록 '친중(親中) 원미(遠美) 혐일(嫌日)'로 흐르는 듯해서 걱정이다. 그것은 필연 미국의 의구심과 일본의 협한(嫌韓)으로 되돌아 올 것이고, 자유통일에 도움 될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한국은 통일되기 전까지는 어차피 '을'일 수밖에 없다'고 하던데 반드시 옳은 말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냉철함이 진짜 지혜로움일지도 모른다.

제14회 재외동포 언론인 대회 개최
본회 4월22일부터 서울 제주 경남서

대한언론인회(회장 김은구)는 서울 제주 경남 일원에서 재외동포언론인협회(회장 김훈)와 제14회 재외동포언론인대회를 공동주최한다.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대회 주제는 '재외동포 복수국적 확대에 따른 진행현황과 동포사회의 의견'이며, 주요 동포언론인 50여 명과 본회 임원 국내 관계인사 등 1백여 명이 참석한다. 문체부,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재외동포재단,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남도, 통영시청 등이 후원한다.

24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의 개막식 전후에는 한양대 김용운 명예교수의 '風水火 - 원형사관으로 본 동북아 평화해법'과 서울시의 '지자체 활성화를 위한 국제문호교류'에 대한 특강도 예정되어 있다.

25일 서귀포에서는 '재외동포 복수국적법 확대에 따른 진행현황과 동포사회의 의견'에 대한 심포지엄이 있고, 정부에 대한 결의문도 채택할 계획이다.

일행은 27일 경남도를 방문해 홍준표 지사와, 28일은 통영시에서 김동진 시장과의 간담회를 갖는다.

본회는 지난 해 4월부터 매년 두 차례 재외동포언론인대회를 공동개최하고 있다.

大韓言論 2015 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인터넷-SNS 從北추방 절실

이석희
·본회 논설위원
·전 KBS 보도국장

北의 대남침투수단
국민불만-불신 부추겨
국가전복까지 겨냥

폐간 판결 利敵신문
한글자만 바꿔 발행
法정비등 대책필요

"나라 바로 세우기!" 이 한 마디는 나라가 기울었다는 뜻이든, 기울어 가고 있다는 경고(警告)든, 당장 우리 모두가 달려들어 '바로 세우지 않으면 나라가 쓰러질 것'이라는 다급하고 절박한 외침으로 들린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나라 바로 세우기' 정도가 아니라 그 보다 더한 무슨 비상조치라도 있어야지 이대로는 안 된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라가 어쩌다 기울게 됐으며 언제부터 이 지경이 됐느냐 하는 것을 따질 때는 이미 지났다.

우리 내부에서 체제를 뒤흔들고 불신을 조장하고 국론 분열을 업(業)으로 삼으면서 북한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자들, 나라를 흔들고 있는 자들, 나라를 바로 세우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는 불순분자들부터 솎아내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그런 자들을 그대로 둔 채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해봤자 말짱 헛일이다.

민주-인권-평화-민족 등 내세운 종북분자 활개

'나라 바로 세우기'의 적(敵)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들어 똬리를 틀고 있다. 부정부패, 비리, 잘못된 의식과 관행 등 반드시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되는 적폐(積弊)들이 산같이 쌓여있다.

전 같으면 세상이 다 그런 것이거니 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일들도 지금의 잣대로 보면 반드시 청산해야할 적폐들이고 세상이 뒤숭숭할 정도로 까발려지고 있다.

사회가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걱정하고 개탄하고 실망할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정화돼 가는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참고 지켜보는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말 심각하게 걱정하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은 따로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꾸고 지켜온 자랑스러운 이 땅 대한민국의 존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 우리 사회의 淨化나 進化가 아니라 국가사회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는 문제들을 외면하는 것이다.

정치권, 언론, 산업현장, 교단, 사회단체, 심지어 사법부까지 숨어들어 민주화, 인권, 평화, 자유, 민족, 평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명분을 내걸고 정부가 하는 일을 가로 막거나 국가안보와 국가발전을 조직적으로 훼방 놓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더 무서운 적(敵)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우리들의 의식(意識)을 갉아먹고 병들게 하는 작태들이다. 북한은 대남침투의 수단으로 인터넷을 비롯한 SNS 등을 최대한 악용하고 있다.

남한에 침투한 고정 간첩과 골수 종북분자들에게 비밀 지령을 내리고 때로는 선동선전 지침을 주어 반정부 반미 투쟁을 조직화하려한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만과 불신을 확산시킨다.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한국-미국 이간질, 북한 체제 선전, 친북사상 전파 등을 위해 인터넷과 SNS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종북 세력, 친북단체, 좌경 정치인과 언론인, 노조, 전교조 간부들과 분별력 없는 철부지들 상당수가 거기에 놀아나 헛소리를 하고 저들이 의도하는 대로 날뛰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대한민국 파괴의 선봉에 서서 이적행위를 일삼던 좌파 인터넷 신문인 자주민보의 경우를 놓고 보자. 대법원은 지난 2월 13일 자주민보에 대한 인터넷 신문 등록취소 심판 사건에서, 폐간을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자 자주민보는 '자주일보'로 또 '자주시보'로 껍데기만 살짝 바꿔 편법운영에 나섰다. 제호와 발행인 이름만 바꾸면 사실상 손을 쓸 수 없는 현행 신문법상의 '등록제'의 틈새와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관련 기관인 서울시는 신문법 22조에 따라 3개월 동안 발행을 정지시키기로 하는 선에서 끝냈다. 대법원이 폐간시킨 반국가적 이적(利敵) 신문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폐간된 자주민보의 발행인 이모씨가 대법원 확정판결 직전에 이름 한 글자만 바꿔 자주일보를 창간했고, 2월 27일부터 자주일보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市로서는 일단 발행 정지 처분을 내린 뒤 후속 대책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법은 기고 불순세력은 날아다니며 종북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국법질서를 지켜야 하는 마지막 보루인 법체계마저 이 정도로 엉성한 것이 현실이다. 법이 미비한 부분도 있겠지만 법이 있어도 법관의 국가관과 사상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법 해석으로 반국가적 利敵性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얼마나 많았던가?

국가관 의심스런 공직 부적격자들 득실

반국가 사범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국민적 지탄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국가관도, 안보관도, 시국관도, 일에 대한 소명의식도 없이 나약한 봉급생활자로서 살아가는 공직 부적격자들이 일을 그르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사람들은 눈치보기, 자기 잇속차리기, 몸 도사리기가 최우선이다. 중요한 일을 맡아서는 안 되는 기회주의자들이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인 공무원 판검사 언론인 교육자들 가운데 야비하고 사명감도 없는 협량한 소인배들이 득시글거리는 것이 우리 사회이다.

거리로 몰려나와 폭도로 변한 데모대에 쫓겨 다니고 구타당하는 경찰, 그들의 후환이 두려운 듯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는 검찰 법원, 그들의 눈치를 보고 비위나 맞추는 정치권, 서릿발 같은 법집행을 해야 할 대통령, 정부당국, 국회… 등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머뭇거린다면 아무리 완벽한 법이 있더라도 있으나 마나다.

정부와 대법원 판결,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비웃으며 농락하고 있는 자주민보의 행태를 보면 종북매체와 반사회적인 매체들을 척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엄격한 규제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에 못지않게 관련 공직자들은 눈치 볼 것 없이 법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정신교육을 시키고 나라를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일도 시급한 일이다.

종북 매체를 뿌리 뽑고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일은 그 일을 앞장서서 다루어야 하는 공직자들의 사명감과 의지가 없이는 효과적으로 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본회 산악회 2015 시산제

30여명참석 안전산행 기원

대한언론인회산악회(회장 이상호)는 지난 3월 27일 정오 북한산 향로봉 기슭에서 올 한해의 무사산행을 염원하는 시산제를 올렸다. (사진)

1부 행사에 이어 가진 시산제는 이상호 회장의 참신례와 초헌례, 안평선 고문의 독축, 장 옥 부회장의 아헌례, 이우진 부회장의 종헌례 순서로 진행됐다. 시산제를 마친 회우들은 오찬 장소인 통나무집으로 자리를 옮겨 201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즐거운 뒤풀이 시간을 가졌다. 정기 총회에는 김은구 본회 회장도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했으며 이상호 회장은 회원들을 대표해 지난 3년간 산악회를 이끌어온 정운종 명예회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행사에 참석한 강진형 고재혁 김성령 김성묘 김세경 김영효 김은구 김주철 김호곤 나용경 맹태균 안평선 안종우 유용현 윤익한 이병대 이보길 이상호 이선희 이성춘 이우진 이재원 이정세 임현태 장 옥 정운종 정창기 조덕일 지용우 최귀조 최상목 황귀근 회우 등 34명 모두 금일봉을 쾌척, 산악회 발전을 기원했다.

부패사슬 끊어야 나라가 산다

防産非理 근절 특단 조치를

지용우
·본회 논설고문
·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6·25참전 언론인회 부회장

지금 대한민국의 중대 당면과제는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된 '부패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일이다.

암세포처럼 번지는 부정부패로 정부 산하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산업계 재계 교육계, 심지어는 군대까지도 예외 없이 썩어 들어가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할지 모를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다.

이제는 어떠한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라를 좀먹는 부정부패만큼은 뿌리 뽑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 국민적인 공감대다. 부패뿌리를 근절하지 않고는 나라의 발전은커녕 장래가 암담하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부패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는 연일 귀가 아프게 떠드는 신문 방송뉴스를 통해서도 잘 알 것이다. 어느 정치평론가가 말 했듯이 지금 우리 사회는 수질로 치면 지렁이조차도 살 수 없는 5급수(시궁창)정도로 부패했다는 것이다.

방산비리는 '망국'의 지름길이다

비리 중에서도 절대로 용서할 수없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방산비리이다. 북한군 총탄에 구멍이 뚫리는 불량 방탄복이 무사히 통과되어 전 장병을 위험앞에 노출시킨 경우라든지, 최첨단 구조함으로 알려진 통영함에 탑재된 수중 음파탐지기가 1970년대 이전에 사용되던 고물장비로 세월호 참사때도 투입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다. 더욱이 이 의혹사건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직·간접으로 연루돼서 검찰수사를 받은 것은 국가적으로도 창피한 일이다.

방산비리는 육·해·공군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으니 만큼 더 늦기 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들은 단순한 비리의 차원을 넘어 우리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상대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했으나 이적행위를 한 셈이다.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는 진한 표현을 쓸 만도 하다.

대한민국은 부정과 비리 때문에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할 위기에 처해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작년에 발표한 한국의 부패인식수준(CPI)은 세계 177개국 가운데 46위로 중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OECD국가 중에선 27위로 최하위국 틈에 끼었다. 지난 2009년에 39위였던 것이 40위권 밖으로 밀려났으니 갈수록 부패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며, 7번째로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명 이상인 나라만 자격이 부여되는 '20-50 클럽'에 가입한 나라의 위상과는 거리가 먼 부끄러운 수준이다.

로마제국은 환락과 다민족 유입으로 망했고, 베트남은 부패로 망했으며, 아르헨티나는 복지로 망했다. 군사, 경제적으로 비대해진 중국도 지금 부정부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한민국은 어느 쪽 전철(前轍)을 밟게 될 것인지 의문이다. 이 문제는 부패지수가 높은 우리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문제다.

전 국민이, 모든 공직자들이 대오 각성해서 다시 일어설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을 것이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엊그제 전 국민을 향해서 '불타는 애국심'을 호소했다. "국민 여러분이 책임을 맡을 운명을 타고났다"고 까지 강조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같은 호소는 한 쪽으로는 와 닿으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냉소를 사기 십상이다. 지금 문제가 된 부정부패는 정부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들의 독직과 비리 때문이지 묵묵히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일반 국민들과는 전혀 무관하다.

2세 교육도 문제가 있다

이웃 일본인들의 자녀교육방식은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 애들이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부모들이 가르치는 것은 질서 지키기, 남에게 폐 안 끼치기, 공공시설 깨끗이 이용하기, 근검절약 등이지 우리 젊은 부부들처럼 영어공부나 음악학원 보내기 등 조기 영재교육에 극성을 부리는 부모는 지극히 드물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 2세들이 나중에 커서 사회활동을 할 때 그 결과는 큰 차이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일깨우려는 것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개인주의 이기주의사상을 부지불식간에 심어주는 반면에 일본인들은 '우리 가정' '우리 부모' 못지않게 국가를 먼저 생각하게 하는 교육으로 자녀들을 유도한다.

일본국민의 부패지수도 지극히 낮고, 단결력과 애국심이 강한 것과 결코 무관치 않다.

반면에 어려서부터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몸에 밴 우리 아이들이 커서 현재 나라의 중추세력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부정과 비리에도 쉽게 물드는 우리 사회의 모습과는 지극히 대조적인 현상이다.

'김영란 法' 손질 뿌리 내려야

김영환
·본회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언론이 자신의 목을 조를 수도 있음을 모르고 학수고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3월3일 국회에서 찬성 228, 반대 4, 기권 15, 찬성률 92.3%로 의결됐다. 다음날 대한변협은 대한변협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 자격으로 언론인 등을 이 법 적용 대상으로 삼은 것은 민간 영역의 과도한 규제로 언론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험로와 거센 후폭풍의 예고로 보인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부패의 기념비적 입법이라 할 만하다.

국회의원 로비 등 제외 문제

법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원안이 내건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3가지 중 반부패 뼈대인 이해충돌 방지가 빠져 '반쪽 법안'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법안 통과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해충돌 방지란 공직자가 친족 등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일은 맡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다. 국회가 여론과 내년 총선을 의식해 서둘러 의결한 김영란법은 시행을 19대 임기가 끝나는 16년 9월의 20대 총선 이후로 미뤄 자신들은 빠지면서 사회의 중대 어젠다를 천연시키는 간교함을 보여주었다.

이 법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 목적의 제3자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은 적용에서 배제해 국회의원 등의 입법 로비 등 브로커 화를 막지 않고 있다. 공직부패의 사슬이 공직자 친족으로 광범히 촉수를 뻗는 현실임에도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국한한 한계도 드러낸다. 반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한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며 적용대상 300여만 명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간다는 비판도 있지만 형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는 반론이 나왔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언론인, 사립교원의 적용에 대해 "뜻밖에 포함돼 놀랐지만 69.8%의 국민이 찬성 의견을 보였으며 과잉입법이나 비례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고 말했다.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부패방지 노력은 공직자에서 다음 단계인 기업, 금융, 시민단체로 빨리 확산해야 하는데 언론은 먼저 적용되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간 자율의 영역이었던 언론사는 정무위 법안소위 심사에서 지방언론의 청탁 횡포를 적시한 한 야당 의원의 주장에 따라 언론중재법 2조 12호가 규정한 방송, 신문, 잡지, 통신, 인터넷언론 등 1만8,000여 개 사를 공공기관에 포함시켜 무차별 적용되게 되었다. 물론 이 법은 사이비 언론을 정화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에게 재갈을 물릴 수도 있다. 그런데 인터넷뉴스서비스업으로 언론사를 흉내 내며 떼돈을 버는 초대형 포털은 비껴갔다. 언론사가 포함돼야 한다면 시민사회단체와 금융기관, 각종 로비단체, 변호사, 의사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정당과 소속 당원, 기업, 그리고 모든 국민이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 보장 등 보완필요

이 법으로 언론의 취재활동은 위축될 우려가 있다. 검찰의 힘은 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걱정에서 독립적인 공직부패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언론 일각에서는 시행 전이라도 국회가 법을 보완하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001년 부패방지위원회 설립으로부터 10여 년이 걸려 만든 이 법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그러나 건국 이래 지켜온 언론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언론의 자유를 세심하게 보장하면서 공직 부패방지에 기여하는 세부 내용을 담아 잘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

2012년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한해 예산과 맞먹는 314조원이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아 지하경제 창궐로 직결될 부패 비용의 몇 배로 세수가 늘어 금융실명제와 함께 경제성장에 플러스가 될 수 있다. 김영란법으로 접대문화가 사라져 경제가 침체할 것이라는 엄살은 부패한 윤활유에 오염된 기득 세력들의 주장일 가능성이 짙다.

한국 民主化 주체는 '순수했던 大學'

'4 · 19혁명'을 되돌아 본다

구종서
·본회 논설위원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한국문명사연구소 대표

9일만에 끝난 숨막힌 민주혁명

〈4월혁명〉은 1960년 4월18일 고대생 3천명의 3·15부정선거 규탄반대시위로 서울에서 시작되어, 26일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의 사퇴표명으로 9일 만에 끝난 민주화혁명이다.

혁명 제1일 고려대 시위대가 광화문 일대에서의 시위를 마치고 경찰의 안내에 따라 귀교도중, 을지로4가에서 종로4가에 왔을 때였다. 화랑동지회 소속이라는 60, 70명의 깡패단이 쇠몽둥이와 갈고리로 시위대를 기습하여, 100명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그중 입원환자는 40명이 조금 넘었고, 나머지는 상처에 붕대를 감거나 반창고를 붙인 채 다음날 다시 등교했다. 깡패는 한명도 검거되지 않았다.

정부기관지 '서울신문'을 제외한 각 신문의 19일자 조간들은 고대시위와 깡패습격 기사들로 신문 전체를 메웠다. 고대생 피살자가 없었음에도, 동아일보는 〈고대생 1명 피살?〉이라는 미확인 기사를 실었다. 신문을 보고 격분한 전국 대학생과 고교생·시민들이 혁명 제2일인 19일 서울 중심부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시위광장은 당시 국회의사당(지금의 서울시의회 자리)이 있는 태평로와 광화문 거리, 그리고 신문로 등 서울 중심부 거리였다.

시위대가 '부정선거 무효' '시위자 석방'을 요구하며 경무대(警務臺 · 지금의 청와대)로 접근하자, 경찰이 발포하여 학생들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참극으로 돌변하면서 시위는 절정을 이뤘다. 이날 3만 명의 시위대 중 경찰의 총에 맞아 199명이 죽고, 1천여 명의 부상자를 냈다. 서울신문사·반공회관과 서울시내 13개의 경찰파출소가 방화로 불탔다.

교수단 시위가 판국을 결정

당황한 정부는 19일 오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 계엄령을 선포됐다. 경찰이 철수하고, 계엄군의 탱크부대가 서울에 진주하면서, 시위사태는 진정될 기미를 보였다. 제7일인 24일 이승만대통령은 부분 개각을 단행하여 서울시장 출신의 허정(許政)을 외무장관으로 기용하고 내무·법무장관을 교체했다.

수습기미가 짙어가자, 현장에서 제자들의 피를 목격한 대학교수들은 유혈의 사태가 이대로 흐지부지되는가 걱정하며 대책을 협의했다. 혁명 제8일인 25일 서울의 대학교수 3백여 명이 "학생 제군, 너희들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서,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위를 벌였다. 군인들이 지키는 비상계엄하의 시위였다.

교수단의 시위는 4월혁명의 대세를 결정했다. 진정되던 시위사태가 다시 긴박해졌다. 진상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이승만은 당초엔 시위를 '좌파진영의 책동'이라고 비판했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유혈과 교수시위가 계속되자, 지식정치인인 이승만은 결단을 내렸다. 혁명 제9일인 26일 이승만이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유혈의 민주화시위는 일단락을 내렸다.

이승만은 27일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 재직 12년의 건국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날 수석국무위원인 외무부장관 허정이 장관취임 2일 만에 과도정부 내각수반이 되어 새로 각료를 임명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자유당 정부와 경찰은 학교 직장 마을 등에 학생·시민의 야당 유세장 참여를 봉쇄하고, 여당의 유세장엔 그들을 강제 동원하는 등 선거과정에서부터 부정행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3·15선거 날엔 40% 사전투표를 벌이고, 야당계 유권자들에겐 투표용지를 주지 않았다.

경찰과 맞서 광화문으로 향하고 있는 서울대-고려대 학생들. (4월 19일 · 종로5가)

80년대 6월항쟁까지 이어져 권력지향 정치인들 역할 못해

지방 고교생들의 시위가 단초

지방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대구(大邱) 고교생들의 2·28데모와 마산(馬山) 시민의 3·15시위 등 반정부 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었다.

4·18고대시위는 지방의 국민저항운동을 직접 보고 개학을 맞아 상경한 학생들이 각지의 흩어진 저항을 수도 서울로 끌어올려 대학생 중심의 전국궐기로 확대하여 성공시킨 점에 가치가 있다. 작은 실개천 물을 대하(大河)로 끌어들여 다시 대양(大洋)의 거센 노도로 이끌어간 궐기였다.

4·19시위학생들은 경찰의 총격을 받으면서도 잡범들로부터 경찰무기고를 지켜주었다. 그때 중앙청 서남쪽에 있는 무기고를 지켜야 할 경찰관은 한명도 없었다. 그 지역에 있던 동국대(東國大) 시위대가 무기고 보호에 나섰다. 총격에 맞아 피 묻은 옷을 움켜쥐고 총을 달라며 다가오는 시위학생들의 접근도 막았다.

경찰무기고 지켜준 동국대 시위대

동국대시위대의 무기고 수비가 없었다면, 서울은 경찰과 학생들의 총격전이 오가는 내란의 피바다를 이뤘을 것이다. 경찰발포로 피해자가 의외로 많았던 동국대 학생들의 희생 뒤엔 대학생다운 이런 순수한 양심이 있었다.

20일 이후 시위는 잠잠해졌지만, 경찰관들은 민중의 보복을 피하여 출근하지 않고 숨어있거나 지방으로 도피해 있었다. 극도의 혼란기에 서울은 정부실종, 경찰부재의 무정부상태가 되어,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위험상황이었다. 대학생들은 학생수습반을 만들어 무력해진 경찰을 대신하여 계엄군과 함께 치안유지에 나섰다. 대통령의 사퇴로 조직적인 시위가 중단된 뒤에도 산발적인 시위가 계속되자, 학생 치안반이 나가 설득하여 돌려보내거나, 무장 계엄군이 나서서 해산시켰다.

정치적 야심 없이 수행된 민주혁명

사회가 안정기에 들자, 계엄사령부(사령관 宋堯讚·육군중장)는 4월 28일 '학생들은 학원으로 돌아가 학업에 열중하라'는 포고문을 내렸다. 학생들은 4월혁명을 성공시킨 주체였지만, 정치적인 욕심은 없었다. 계엄사포고를 계기로 학생들은 정치를 야당에 맡기고 전원 철수하여 학교로 돌아가, 중단됐던 수업이 10여일 만에 정상화됐다.

4월혁명을 지켜본 세계의 신문들은 한국학생들의 순수하고 올바른 행위를 극찬하여 보도했다. 자유당의 부정개헌을 보고 "쓰레기장에서 장미는 피어나지 못한다"고 한국 민주화를 조롱했던 영국신문들이 "한국인들은 쓰레기더미에서 장미꽃을 피워냈다"고 칭찬했다.

터키에선 "한국학생들을 본받자"면서, 대학생들이 반독재에 나서서 민주시위를 강행했다. 그것은 1919년 한국의 3·1운동을 지켜본 중국의 북경대학생들이 서구와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여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애국운동을 전개한 것과 유사한 '한국 본받기 현상'이다.

4월혁명은 제2차대전 이후 등장한 식민지 후진국가에서 이룩한 최초의 성공적인 민주화혁명이었다.

수훈자는 정치인 아닌 대학생들

한국은 건국 40년 만에 경제산업화와 정치민주화를 달성한 효율적인 근대화 성공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국제적인 호평을 받아낸 것은 바로 대학생 세력이다.

60년대 대학생 중심의 4월혁명 성공은 한국민주화의 주체세력은 정치인이 아니고, 대학생임을 역사적으로 정착시켰다. 박정희 군사정부를 내분으로 붕괴하게 만든 것은 70년대 부산-마산 사태를 일으킨 대학생시위였다. 전두환 군사정치를 종식시킨 것도 80년대 6월항쟁을 주도한 서울의 대학생들이었다.

보통 YS나 DJ를 한국민주화의 공로자로 꼽는다. 그러나 그들은 고속도로 건설을 방해하면서, 민주화의 배후 제2선에 앉아있던 권력지향자들일 뿐이다.

4월혁명 후 집권한 윤보선-장면 등의 민주당 세력이 혁명의 여덕을 보았을 뿐 민주혁명의 주체가 아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YS나 DJ도 반군정(反軍政) 학생민주세력의 승리에 편승하여 정권을 얻었을 뿐, 군사독재 청산이나 정치민주화의 주체적 실현자는 아니다.

한국민주화의 수훈자(殊勳者)는 바로 대학의 민주세력이다. 80년대 들어서는 반국가(反國家) 친북좌경세력이 민주시위에 끼어들어, 60~70년대 반정부(反政府) 민주학생시위의 순수성이 오염됐다. 그러나 민주화의 선봉대(先鋒隊)였던 대학세력이 없었다면, 한국의 합법적인 정권교체나 정치민주화는 훨씬 어렵고 지연됐을 것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금융강국을 향한
힘찬 레이스!
대한민국 발전의 금융엔진, 글로벌 KDB
지난 60여 년간 대한민국 산업발전과 함께 한 산업은행, 2015년 1월 1일 통합산업은행으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 창조경제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엔진이 되겠습니다.
KDB Bank
KDB산업은행
KDB산업은행

언론을 말한다 Inside Journalism 인사이드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한계

연출없는 실제상황 시청률 높아
正道 벗어난 加虐性 눈에 거슬려

방송시평

유자효
·본보 편집위원
·전 KBS 파리특파원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TV는 세상의 축소판이다. 온 세상의 다양한 모습들을 TV는 보여준다. 유한하고 한계가 많은 우리의 삶이 갈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까지 TV는 보여준다. 세계 최고의 현인들 앞으로 TV는 데려다준다. 그들의 생생한 육성과 모습들을 시청자들은 집 안에서 만날 수 있다.

TV가 바보상자라는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TV를 통해 지적 체험을 할 수 있다. 프로그램들에는 고도의 상상력과 예술성이 녹아 있다. TV는 대중성과 전문성을 함께 갖춘 문화 매체다.

현대인의 삶에서 TV를 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면 TV를 켜고, TV를 끔으로서 하루를 마감한다. 날씨가 궁금해도 TV를 찾고, 증권 시세가 궁금해도 채널을 돌린다. 드라마를 통해 희로애락을 함께 한다. 신문에서 연재소설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그 자리를 TV 연속극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요즘 TV의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대세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연출이 작용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 그대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이 따라갈 수 없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현실이 소설보다 더 극적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 인생이 보여주는 복잡다기함을 소설가의 상상력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말이겠다.

드라마·쇼보다 재미

그런 점에서 잘 만든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드라마나 쇼보다 훨씬 재미있다. 생후 2, 3살 짜리 아기들이 주역으로 등장하는 프로그램을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다. 그런데 아기들이 보여주는 순진무구한 모습, 때묻지 않은 모습에 시청자들이 몰입한다. 또 젊은 아빠들의 육아 모습에서 공감이나 기시감을 느끼기도 한다. 유명 연예인인 젊은 아빠가 허둥대고 쩔쩔매는 모습이 연기 이상으로 재미있다. 바로 이런 것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강점이다.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왜 아빠들이 육아의 주역으로 등장하는지… 젊은 부부들 세계에서는 이제 육아가 부부 공동의 몫이거나 육아를 잘해야 남편들이 부지할 수 있는 쪽으로 세태가 바뀌었으리라. 그것보다는 인기 연예인이기 때문에 육아 프로그램의 대상이 됐을 것이고, 프로그램 출연 스케줄 잡듯이 촬영 프로그램을 잡았을 것이다. 대상도 하나보다는 쌍둥이, 쌍둥이 중에도 세 쌍둥이가 더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아기도 활동성이 더 많은 아기가 유리할 것이다. 엄마가 연예인일 경우에는 아기와 엄마가 주로 등장하기도 한다. 어쨌든 아기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프로그램이 VOD 매출 1위를 기록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꽃보다 할배〉〈꽃보다 누나〉 등의 프로그램으로 연속 히트를 치던 PD가 이번에는 요리 프로그램을 들고 나왔다. 이 요리 프로그램은 준비된 상황에서 제대로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오지 어촌의 세 남자가 유사 가족을 이루며 자급자족 삼시세끼를 차려 먹는 다소 황당한 내용이다. 별 얘깃거리가 없는 막막한 상황에 인물을 던져놓고 요리를 하게 한다. 한 남자가 갯가에 나가 주섬주섬 챙겨온 재료들로 한상 뚝딱 차려낸다. 심심하기 짝이 없는 프로그램이다. 줄거리나 반전도 없다보니 지루하다. 먹고 자는 게 이 프로그램의 전부다. 그런데 케이블 TV에서 방영된 이 프로그램은 시청률 13.9%(3월 6일·닐슨코리아·유료가구 기준)을 기록해 동시간대 지상파들을 누르고 1위로 등극했다.

이렇게 심심한 프로그램이 시청률 1위라니… 바로 이런 것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힘이다. 이 프로그램은 요즘 트렌드인 '슬로 라이프'와 맞아 떨어진다. 삶이라는 게 결국은 식구들과 한 끼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공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클라이맥스나 반전 없는 밋밋함은 어쩔 수 없다.

20, 30대 남성들의 술자리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이 군대 이야기일 것이다. 군 체험은 자유분방하게 살던 젊은이들이 체험하는 최초의 속박이요, 육체적 시련이기 때문이다.

병역은 대한민국 남성들의 공통의 의무다. 그러나 결코 녹록지 않다. 우선 입대 초기의 적응이 어렵고, 2~3년의 병영 생활이 많은 개인적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군대 생활은 남성들 공통의 화제이자, 때로는 향수처럼, 때로는 떠올리기 싫은 추억처럼 회자되는 것이다.

이런 군대 체험이 리얼리티 프로그램 연출자들의 눈을 비켜갈 리 없다. 처음에는 군에 다녀온 남성 연기자들을 입소시켜 훈련받는 과정을 재연했다. 이들은 군 복무 때와는 다르다며 무척 힘들어 했다. 그리고는 역시 군 체험은 어려운 것임을 이구동성으로 실토했다.

안쓰러운 모습 꼭 봐야하나

그런데 이제 병영 프로그램에 여성 연예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 여성들은 신병 교육대에 입소해 신병들과 같은 훈련 과정을 거친다. 사병들의 기초 군사 훈련도 힘든데 하사관 교육까지 받게 한다. 당연히 병영 체험이 처음인 여성 연예인들은 무척 힘들어 한다. 사격장에서 옆의 총소리만 들어도 화들짝 놀란다. 거기에는 40대 여성도 있다.

이 프로그램은 눈물 투성이로 훈련을 받는 여성 연예인들의 모습을 밀착해서 생생하게 보여준다. 피로에 지쳐 야간 야외 텐트에서 코를 드르릉 드르릉 골며 잠자는 모습, 화생방 교육장 안에서 괴로워하는 모습, 밖으로 뛰쳐나와 눈물 콧물로 뒤범벅이 되는 모습, 유격훈련장에서 공중에 매달려 오지도 가지도 못한채 비명을 지르는 모습 등을 보여준다.

도대체 그런 모습을 시청자들이 왜 보아야하는 것일까? 가학 취미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연예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까? 이 역시 궁극적인 목적은 시청률이었을 것이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촬영하는 현장을 본 적이 있다. 수십 명의 스태프들이 현장에 진을 치고, 실내외에 많은 카메라들이 고정 설치되고, 여러 명의 카메라맨들이 밀착 촬영하고 있었다. 연출자가 원하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 반복 촬영되었다. 연기에 가까운 장면도 나왔다. 나중에 방송될 때보니 극히 일부만 방영되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도 그랬을 것이다. 군 복무를 자원한 장정들도 하사관에 임용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오랜 훈련 시간이 걸리고 중도 탈락자도 많이 나온다. 그런데 이 여성 연예인들은 기초 군사 훈련에 하사관 교육까지 대체 얼마나 교육을 받고 임관식장에 섰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군과 민간의 거리를 얼마나 좁혀줬는지, 이 촬영으로 일반 교육생들의 훈련에 얼마나 지장을 주었는지, 하사관 교육 과정을 얼마나 왜곡시켰는지도 알 길이 없다.

아기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은 한 프로그램이 성공하니 다른 채널들에서 다른 연예인들을 내세워 유사 프로그램들을 내보냈다. 이러다가는 웬만큼 인기 있는 젊은 연예인의 아기들이 총동원될 판이다. 병영 체험 프로그램도 남성 연예인을 다시 군에 보내는 발상이 남성들의 향수심을 자극해 성공하자 여성 연예인을 입대시키는 더 자극적인 쪽으로 전환되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재미와 유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정도를 지켰을 경우에 그러하다. 자칫하면 현실과 가상의 벽이 허물어질 수가 있다. 이제 아기들은 부모의 품으로, 여

언론인은 왜

'신문의 날'

특별

정

·본회 명예회
·한국 외국어

제한없는 자
편파 왜곡 난

김영란법 포
自省의 화두
받아들여야

'신문의 날'은 언론의 사명을 되새기면서 성찰의 시간을 갖자는 취지를 담아 제정한 날이었다. 언론계가 공동으로 채택한 표어를 내걸고 그 실천을 다짐하기 시작한 때는 1959년 제3회 신문주간부터였다. 언론 4대 기간단체(基幹團體) 신문협회, 편집인협회, 통신협회, 기자협회가 공동으로 갖는 행사는 무게가 있었다. '언론의 자유'(제3회·1959년), '악법의 철폐'(제4회·1960년), '신문의 책임'(제5회·1961년)과 같은 표어에서 읽을 수 있듯이 언론이 당면한 현안을 타개하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었다. 언론계 내부에서는 신문윤리강령의 실천을 다짐하면서 언론인의 참된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로 삼기도 하였다.

하지만 신문의 날이 제정된 1957년 이후 5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처음과는 달리 이날이 갖는 의미는 현저히 퇴색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근년에는 신문주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는 소리 없는 행사로 격하된 느낌이다.

언론계는 안팎으로 문제가 많았다.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까지는 면세점 이하의 낮은 급료를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하며 기자협회가 캠페인을 벌여야하는 생존권 투쟁의 시기였다.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던 시절의 자화상이었다. 사이비기자 일소 캠페인도 벌여야 했다. 5·16 후 군사정부는 부패기자 일소를 요구하면서 언론계의 정화를 압박했을 정도였다. 돌이켜 보면 격세지감의 느낌이다.

이제 언론 환경은 현저히 향상되었지만 언론계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방송 통신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의 영향력 확대로 신문의 위상은 많이 위축되었다. 더욱 심각한 현상은 언론이 불신과 차가운 냉대의 시선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전에는 외부의 압력과 권력의 탄압이라는 핑계를 댈 수 있었다. 내부적으로는 경영주의 횡포로 기자들이 위축되고 본연의 사명에 충실할 수 없다는 이유도 내세웠다. 지금도 그런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제는 권력의 물리적인 탄압은 거의 없어졌다.

권력이 예전처럼 언론을 탄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언론의 자유는 대체로 제한 없이 보장되어 있다고 나는 판단한다. 경영주의 전

저널리즘 Inside Journalism 언론을 말한다

오각성하라

에 바란다

기고

진석

명예교수

유속

무

함

로

횡을 견제할 수 있는 사별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 상급 단체인 언노련은 오히려 경영주에 대한 압력단체의 역할도 맡고 있다.

이같은 상황인데도 언론은 과거 어려웠던 시절보다 더 불신을 받고 있다. 김영란법에 언론을 처벌 대상에 포함 시킨 것에 대한 논란을 한 예로 들고 싶다.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언론인을 왜 이 법의 처벌 대상에 포함 시켰는가 하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아마도 이 법은 시행되기 전에 수정될 것이 확실시 되므로 그 때에 가서 필시 언론인 조항은 삭제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어째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여 언론인 처벌 조항을 넣었느냐 하는 문제는 짚어보아야 한다. 과잉입법이라거나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비판을 할 수는 있다. 이같은 비난과는 별개로, 김영란법은 언론을 향해서 성찰의 화두를 던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편향된 논평, 왜곡된 기사, 사실보도에 주관을 뒤섞은 기사는 없는가. 진지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광고 강매, 이른바 협찬 강요와 같은 부조리가 없다고 떳떳하게 단언할 수 있는가. 기업체의 광고성 기사를 가득 채운 섹션을 남발하는 일이 아침마다 벌어지고 있으니 신문의 신뢰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같은 사안을 놓고 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한 눈은 감고 외눈으로만 사물을 보고 평가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언론의 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언론이 사회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인을 포함한 독자들은 벌써부터 잘 알고 있다. 언론인들의 대오각성이 요구되는 심각한 위기의 순간이다. 언론은 신문의 날을 제정하던 당시의 자세로 되돌아가야 한다.

신문의 발행부수는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인쇄매체의 전반적인 쇠락이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신문 산업의 위기는 우려할 수준이다. 언론이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독자로부터 더욱 외면당할 것이다. 개화기 이래 자주 독립 계몽 항일의 전통을 이어받아 광복 이후에는 민주화와 산업화에 이바지해 온 언론이다. 그동안 시행착오도 있었고, 과오도 많았다. 그래서 신문의 날을 만든 것이다. 이 날을 맞아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깊이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성 연예인들은 가족의 품으로 보내주었으면 한다. 천방지축 아기들과 콧물 주렁주렁 매달고 헤매던 여성 연예인들을 광고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 그리 편하지 않다.

부패수사 비판 논조 눈살

"정략적 접근" 일부신문 평가절하
日의 사죄 강대국논리 동조 우려

신문시평

박석흥

·본보 편집위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대우
·전 언론법학회 감사

'한국사회의 위험과 사회과학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원 창립50주년 기념 학술회의(3월20일)에서 김상욱 성대교수(사회학)는 '1990~2014년 한국 사회의 공정성 및 불평등 국내 추이 및 국제 비교 분석' 논문을 통해 "한국의 부정 부패가 위험 수준이며 특히 정치인들의 권력형 부패를 국민들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교수는 이른바 민주화 이후 "분배나 정보 공정성에 비해 절차의 공정성이 일관되게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25년 한국인들은 '정치적 연고' '뇌물 공여' 등 귀속적 요인을 개인의 능력·학력·열성 등 본질적인 성취 요인보다 중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국민들이 공무원 부패는 세계 35개국 중 16위로 중간 정도로 보지만 정치 부패는 35개국 중 6위로 인식, 정치인 부패를 특히 문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뢰·체계·리더십의 과제'를 발표한 윤비 성대교수(정치외교학)도 "우리 사회의 윤리와 법체계가 무너졌다"고 진단하고 "그 상당 부분은 정치권과 정치 리더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교수는 "2014년 국민의식 조사에서 대통령 신뢰도가 100점 만점에 59.2점, 시민사회가 48.8점, 국회가 38.2점, 언론이 39.2점으로 평가됐다"고 밝히고 국회와 언론의 신뢰 추락을 주목했다.

"정파저널리즘" 분석도

3월 한국신문은 박근혜정부의 '정치부패와의 전쟁'과 미국·일본·중국과의 '외교와 안보의 딜레마'를 중요 기사로 보도했다. 시대적 과제인 두 쟁점에 대해 일부 신문이 이견을 제시한 것이 주목된다. 일부 보수 신문은 권력형 정치부패 수사를 정략적 접근이라고 비판했으며 미국·일본의 외교 압력에 따를 것을 권고하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공론을 외면한 이러한 일부 신문의 논조는 감시 기능보다 진영 이익을 우선시하는 고질적인 정파저널리즘의 속성을 드러낸 부패 현상이라고 분석하는 언론학자도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3월 12일 취임 첫 대국민 담화를 발표, "방위산업 비리·해외 자원개발 관련 범죄· 대기업 비자금 조성·공직 기강 해이 등 부조리를 발본색원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완구 총리의 권력형 부패 척결 선언을 색안경을 쓰고 비판하는 신문도 있었지만 국민 대부분은 "이번만은 용두사미가 안되길" 당부하며 "정치 부패가 극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부패 추방'·'종북세력 척결'·'YS~MB 20년 적폐 청산'은 박근혜대통령이 임기중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다. 박대통령은 2014년 현충일 추념사, 세월호 대국민사과 담화문, 2기 내각 출범과 정부조직 개편에 즈음한 당부의 말로 "국가 적폐 해소와 비정상의 정상화, 공공 개혁과 경제 혁신"을 호소했으나 기득권 부패세력의 저항으로 개혁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불통' 비방을 들으면서도 박근혜정부는 2014년 11월 검찰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정예요원 105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 정부합동수사단을 구성하는 등 2년간 준비한 전직 대통령과 권력 실세들의 연루 혐의가 있는 정치 부패 척결을 경찰 출신 총리에게 맡겼다. MB 정부 자원외교 비리, 역대 정권의 최고 권력과 재벌의 야합, 무기 도입 과정의 부정과 방산 범죄, 국회의원 뇌물수수 등 20년 적폐를 이완구 총리가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MB 계열 국회의원·정상배·정파저널리즘의 파상 공세가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새 시대를 준비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부패 척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포스코·동부·SK·경남기업의 부정부패를 수사하자 MB계열 의원들이 박근혜정부의 부패와의 전쟁에 도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MB 비서들이 로비에 적극 나서 일부 신문엔 이번 사정 작업이 이완구총리의 사감에서 비롯된 것이며 정략적 이라고 평가절하 하는 기사·해설·사설이 실리기도 했다.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수감으로 정치 부패 척결에 성역은 없어졌다. 박근혜정부의 사정 작업이 YS 아들구속·DJ 아들 구속·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로 흐지부지됐던 권력형 비리 사정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다. 새누리당이나 박근혜정부 내각에 부패 연루 세력이 있다면 과감하게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할 것이다.

일부 신문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기업 비리조사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정치 권력과 야합한 정상배들의 국고 약탈과 세금 포탈을 모두 환수하고 새 출발 하도록 공론을 조성하는 것이 언론의 공정한 자세일 것이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했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제안자는 "국회의원의 브로커화를 용인할 수 있게 됐다"며 원안에서 후퇴한 반쪽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부패 정치인의 체질개선과 자정 작업은 요원한 것 같다. 기득권 개혁 대상에게 '불통'으로 비난 받았던 박 대통령이 국민 설득에 나서고 중동 순방 효과, 리퍼트 주한 미대사 피습 사건 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39~40%로 올라 '부패와의 전쟁'에 대한 국민지지는 기대할 만하다.

외교 딜레마 보도 독자들 혼란

부패 정치세력 척결과 함께 박근혜정부는 미국·중국·일본과의 현안도 타결, 안보와 국익을 챙겨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3·1절에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동반자로서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 나가자"고 일본에 제의했으나 일본은 한국을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대신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대답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도 "과거사는 한·중·일 3국 모두의 책임"이라고 왜곡하고 "민족감정은 악용될 수 있고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해 값싼 박수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막말을 했다. 미 국무부 3인자가 일본편에 서서 망언을 한 것이다. 그러나 데니스 핼핀 존스 홉킨스대 초빙연구원은 "현재 쟁점은 위안부와 난징대학살이지만, 일본이 태평양전쟁의 희생자로 역사를 수정하게 되면 미국이 가해자가 되고, 트루먼이 전범이 된다"고 경고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3월 9일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과거사 정리는 가해국과 피해국 간의 화해를 위한 전제"라고 말하고 "가해자가 과거를 완전히 매듭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항상 과거와 마주 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기본조약을 통해 종결 됐다는 아베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한일과거사 국제논의는 한국에 동정적이지만 오바마정부는 일본 편향적이다.

일부 한국 신문 논객과 정치인들이 국익과 안보 관점에서 논의해야 할 북한핵 대비와 일본의 침략 사죄 문제에 관해 강대국 논리에 동조하고 있어 독자들은 혼란스럽다. "동맹국은 스스로 자신의 방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닉슨의 괌 독트린선언에 따라 미사일과 핵 개발을 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전야에 조성 됐던 분위기가 연상되는 정국이다. 한국도 동맹국으로 성장, 미국에 필요한 나라가 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한미 방위조약 체결과정에서 야당은 미국 주장에 동조했으며 한·미 동맹 재조정 과정에서는 국가 백년대계 보다 일부 정치인의 단견으로 졸속처리 됐다. 이런 반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문이 감시해야 할 것이다.

제25회 신문사진 인간애상 수상작 발표

대한언론인회는 2015년도 제25회 '신문사진 인간애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시상식은 4월 7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열린다.

'신문사진 인간애상'은 4·19 민주혁명 격동의 현장에서 소명의식을 갖고 역사의 기록을 담았던 60년대 사진기자들의 모임인 한국신문사진동우회(회장 박용윤)가 1991년에 제정한 상으로 2007년부터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가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올해의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대상〉 • '함께하는 슬픔'(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우수상〉 • '이제 울어도 괜찮아'(뉴시스 김인철 기자)

〈장려상〉 • '소녀상에게도 우산을'(서울신문 박윤슬 기자) • '선생님은 내 사랑'(동아일보 양회성 기자)

• '러시아의 홈 텃세를 극복하고'(스포츠경향 이석우 기자)

• '전우여… 잘 지냈는가'(이투데이 최유진 기자)

대 상

도광한 (연합뉴스)

함께하는 슬픔

박근혜대통령이 2014년 4월 17일 오후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사고의 실종자 가족이 모여있는 진도체육관을 방문, 부모가 모두 실종된 한 어린이의 뺨을 어루만지며 위로하고 있다.

우수상

김인철 (뉴시스)

이제 울어도 괜찮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심석희(오른쪽)와 조해리가 2014년 2월 18일 오후(현지시간) 러시아 소치 해안클러스터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뒤 서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장려상

이석우 (스포츠경향)

러시아의 홈 텃세를 극복하고

유만균이 2014년 3월 8일(현지시간) 러시아 소치 샤이바아레나에서 열린 2014 장애인동계올림픽(Paralympic) 아이스슬레지하키 경기에서 승부샷 끝에 극적인 승리를 하고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심사소감

박용윤 (한국신문사진 동우회장)

제 25회 '신문사진 인간애상'을 선정하면서 보도사진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인간의 사랑과 겸손과 예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 현역 사진기자 시절, 4·19 민주혁명의 역사적 기록과 소명에만 전념, 눈앞에 전개되는 현상의 기록에만 급급하여 소중한 '인간애'를 배려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1991년부터 시상하게 된 '사진 인간애상'이 어느덧 25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남을 위해 그늘에서 묵묵히 도와가며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음은 우리 사회를 밝게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우리나라의 앞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작품을 보면서 덧붙이고 싶은 점은, 보도사진의 앵글과 주는 메시지가 보는 이에게 좀 더 강하게 마음에 와 닿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간애상' 창설 때부터 신문사진의 특수성과 작품 선정에 애써주신 한국신문사진동우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대한언론인회의 오랜 운영경험으로 부족한 기금(기부금 1억원)으로 매년 시상식을 진행해 주시는 대한언론인회 김은구 회장님 이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상소감

대상-도광한

세월호 참사가 터진지 하루 만에 박근혜 대통령은 진도로 향했다. 대형 참사에 대통령이 이렇게 빨리 현장을 찾은 것은 처음이었다.

실종자 가족들과 30여분동안 대화한 박 대통령은, 부모를 모두 잃고 친척 품에 안겨 울고 있는 한 어린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 체육관을 나서다 발길을 돌려 어린아이의 뺨을 어루만지는 대통령의 표정에는 비통함이 가득했고 애써 눈물을 참는 모습이었다. 예상 밖의 동선이었던 데다가 경호원과 수행원, 다른 실종자 가족에 둘러싸여 있었던 탓에 겨우 한두 컷 찍을 수 있었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울부짖는 실종자 가족의 고통과, 그를 마주한 박 대통령의 모습에서 '잊을 수 없는 비극'임을 새삼 느끼게 했다.

우수상-김인철

처음 가는 해외출장에 올림픽이라는 큰 취재를 앞두고 부담반 설렘반으로 소치로 향했습니다. 취재 첫 날 다친 다리 때문에 한달 내내 고생해야 했지만 스스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값진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한 뒤에 받은 상이라 저에게는 더 뜻 깊고 소중한 인간애상입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열심히해 더 좋은 사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7일 프레스센터서 시상식

장려상

박윤슬 (서울신문)

소녀상에도 우산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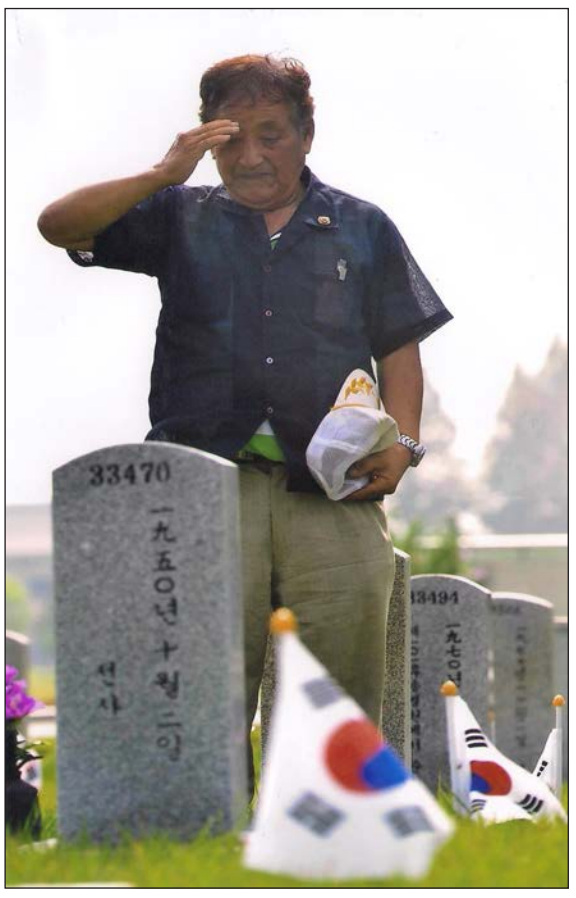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집회에서 비가 내리자 한 참석자가 소녀상에 우산을 씌워 주고 있다.

장려상

양희성 (동아일보)

선생님은 내 사랑

초등학교 여름방학이 끝난 2014년 9월 18일 서울 성북구 돈암동 성신초등학교 1학년 교실. 한 어린이가 오랜만에 만난 담임선생님을 뒤에서 꼭 끌어안고 애정표현을 하고 있다.



장려상

최유진 (이투데이)

전우여… 잘 지냈는가

6·25전쟁 64주년인 2014년 6월 25일 한 참전용사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전우의 묘를 향해 경례하고 있다.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38

너무 오래 앉아 지내면 조기사망

이광영
·본회 논설위원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한국 골든에이지포럼 상임이사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여도 너무 오래 앉아서 지내면 조기 사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학술지 내과학회지(Annals of Internal Medicine)에 게재돼 관심을 끈다. 연구자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 토론도 재활연구소(Toronto Rehabilitation Institute) 박사과정 비스워스(Aviroop Biswas) 연구원. 그는 그 동안 발표된 앉아서 지낼 때의 건강문제와 관련된 연구 논문 47편을 모아 다시 분석함으로써 이번 연구결과를 얻었다.

비스워스 연구원은 매일 주로 앉아서 지내는 사람들은 심장병, 당뇨병, 암 등의 발병률이 높았을 뿐 아니라 조기 사망할 가능성이 아주 높게 나타났다며 이런 경향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고 했다. 장시간 앉아 지내면서 정기적인 운동조차 하지 않는 사람의 건강 상태는 더욱 나빴다.

비스워스 연구원은 앉아 지내는 시간이 하루에 8시간 이상이면 과도하게 오래 앉아 지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동차운전, 컴퓨터사용, TV시청 등을 포함하여 앉아서 지내는 시간이 모두 합해 하루에 4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캐나다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Agency)이 발표한 지침을 상기시켰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운동이란 따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육체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오래 앉아서 지내면서 육체적인 활동을 적게 했을 때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질병은 제 2형 당뇨병으로 운동하면서 육체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 비해 발생위험이 90%나 높다. 뿐만 아니라 암 그 중에서도 유방암, 대장암, 자궁암, 난소암 등이 특히 좌식생활과 관련이 깊다.

한 연구에 의하면 7~8시간 이상 앉아서 지내는 사람들은 그보다 적게 앉아서 지내는 사람들보다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이 14% 높았다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매년 320만 명이 부족한 활동량으로 사망하며 네 번째로 높은 사망원인이 된다고 했다.

비스워스 연구원은 ●30분마다 1~3분 휴식 및 서서 돌아다녀라. 그러면 오래 앉아서 지내는 것보다 칼로리를 두 배 이상 소모하게 된다. ●TV를 시청할 때 일어나 서서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시청하라. ●하루에 전보다 15~20분정도 앉아서 지내는 시간을 줄여 하루 중 앉아서 지내는 시간을 총 2~3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라고 권고한다.

'이승만과 박정희' 특별강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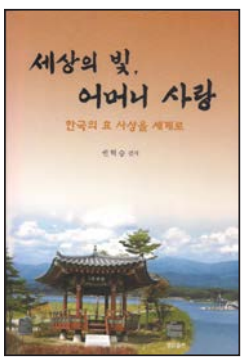
우남탄생 140년인 3월 26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민국 67년-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자유통일' 제하의 특별강연회가 열렸다. 뉴데일리(회장 인보길·본회 부회장)창간 10주년 기념행사로 열린 이번 강연회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흥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대한민국이 선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강연회에는 문창극(전 국무총리 지명자-우남의 나라 만들기), 이호(목사-우남의 건국정신), 조갑제(조갑제닷컴 대표-박정희의 나라 잘살게 만들기), 류근일(전 조선일보 주필-우남과 박정희를 넘어 자유통일로)씨 등이 연사로 나왔다

권혁승 회우 편저 '세상의… ' 출판기념회

권혁승(전 서울경제신문 사장·현 백교문학회 회장) 회우 편저 '세상의 빛 어머니 사랑' 한글판과 영문판 책 출판기념회가 지난 3월 23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개최됐다.

'한국의 효 사상을 세계로'라는 효사상 운동을 위해 펴낸 이 책에는 권혁승



회우와 대한언론인회 김후란 김승웅 회우, 그리고 홍일식(전 고려대총장), 신봉승(시나리오작가), 조순(전 부총리)씨 등 60여명의 글이 실려 있다.

이날 출판기념회를 가진 '세상의 빛 어머니 사랑' 영문판은 세계 각국 주요 도서관에 배포된다.

새로쓰는 병은 낫는다 〈18〉

양생법의 뿌리와 열매

나의 治病記 — 통풍·당뇨·고혈압·심장병 (中)

권도홍
·본회 회오
·전 동아일보 편집부장
·전 주부생활 부사장

고혈압과 심장병 이야기를 쓰기 전에 당뇨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뭘 먹었는지 조금 더 부연(敷衍)할 필요가 있다. 17회에 쓴 것처럼 나는 식습관을 바꾸고 인슐린이 모자라니까 근육으로 하여금 혈당을 줄이게끔 운동(걷기)을 지속적으로 병행함으로써 당뇨병에서 벗어났다. 당뇨병 진단 이후로 당뇨약을 복용하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은 일도 없고, 병원에 간 일이 한번도 없다. 지금 다니는 헬스클럽에서 점심 식사 2시간후에 혈당을 측정해 보면 100에 불과하다. 그것도 그럴 것이 대개의 경우 나의 섭취 칼로리는 하루에 1,500칼로리를 넘지 않는다. 아침과 점심이, 친지를 만나 회식을 하는 일이 없는 한 밥을 먹지 않고 과채식(果菜食)과 작은 고구마 하나로 족하다. 그렇다하더라도 주식(主食)을 빼버린다고 해서 '떼운다'는 것과는 다르다. 체중은 늘 62Kg선에 있고, 힘이 빠져서 축 처져있는 일은 한번도 없다. 헬스클럽에서 조깅머신을 타고 빠른 걸음으로 걷는데 매일 한 시간에 5.6Km를 기계처럼 걷는 것이다. 5.6Km는 딱 7,000보(步)다.

그 다음은 발바닥을 벨트롤러에 걸고 20분동안 마사지를 하는데, 발바닥에는 내장을 비롯해 시각(視覺)과 청각(聽覺)과 이어지는 66개의 경혈(經穴)이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 가는 일이 없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게 아닌가? 이건 짐작이다. 유의할 점은 하루도 거르는 일이 없고, 시간을 줄이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다. 한번 정하면 결코 편법을 쓰지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다. 어떤 헬스회원도 나처럼 정해진 운동량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계처럼 움직이는 사람은 볼 수가 없다. 내 나이의 절반밖에 안돼 보이는 젊은이도 나처럼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의사들이 건강 서적을 나처럼 지속적으로 읽을 이유가 없겠지만, 어떤 사람도 건강에 관한 책이나 영양에 관한 책을 나처럼 읽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수십년동안 보이는 대로 새 책을 구입하고 일본서적을 주문해서 읽는데 일본사람이 쓴 책은 서양사람이 쓴 책보다는 수가 훨씬 적다. 거의 번역본이라는 뜻이다. 일본글이나 중국글(한문)보다 영어가 짧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일본어로 번역된 중요한 서양책을 읽은 다음 교보문고의 외서부(外書部)에 가서 원본(영어)을 주문해서 보름 뒤에 원서가 도착되면 그걸 또 읽기 시작하는데 일본번역본을 읽었기 때문에 훨씬 쉽게 읽을 수가 있다. 나이 80을 넘어 영어가 꽤 늘었으니까 우습다. 젊었을때 할 일이지.

중요한 것은 당뇨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식습관을 바꾸었다고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먹었는지 궁금할 것이다. 내가 당뇨병의 개선 내지는 완쾌를 자신한데는 미국의 여류영양학자 '진 · 카퍼(JEAN · CARPER)'의 『음식—당신의 불가사의한 약(FOOD YOUR MIRACLE MEDICINE)』이라는 저서에서 얻은 건강정보가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CNN(방송)의 우수한 의료기자였던 '진 · 카퍼'는 미국을 대표하는 위생학의 제1인자이며 전 미국의 60개 이상의 신문에 건강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일본 번역본과 원서를 다 가지고 있으므로 하도 읽어서 웬만한 것은 훤하다. '음식—당신의 불가사의한 약'에 『당뇨병을 해독하고 치료하는 음식(DIABETES : FOOD ANTIDOTES AND REMEDIES)』, 곧 양파, 마늘, 계피(桂皮 · Cinnamon), 고(高)식물섬유식품, 콩류, 고(高)크로뮴식품 등이 실려있는데 양파 · 마늘 · 콩류는 잘 알려진 식품이지만 계피가 당뇨병에 유효하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정보다. 미국 농무성(農務省)의 앤더슨 박사는 계피가 인슐린의 작용을 높이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혈당처리에 유효한 몇 가지 스파이스 중에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 것은 계피라는 것이다. 토스트에 뿌린 약간의 계피가루도 인슐린 활성(活性)을 높인다고 한다.

마늘도 당뇨병이나 심장병에 듣는 첫째가는 식품이지만 당뇨병에는 양파가 더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마늘은 자극성 때문에 날로 먹기가 거북하지만 양파는 날로 먹거나 익혀먹거나 그 효력이 같고 마늘보다는 덜 자극적이라서 지속적으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인것 같다. '진 · 카퍼'는 양파가 인슐린의 합성과 방출을 자극하는 당뇨병약(血糖降下藥) '토루브타미드'와 유사한 화합물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토끼를 사용한 실험에서는 양파에서 추출한 물질은 '토루브타미드'의 표준처방량과 비교해서 77%의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진 · 카퍼'는 지방섭취를 경고하고 있다. 『지방은 인슐린의 친구가 아니다(FAT—NO FRIEND OF INSULIN), 지방을 제한하라! 지방은 당신이 당뇨병이 되도록 촉진한다. 콜로라도 대학 건강과학센터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지방을 40그램 여분으로 섭취하는 일이 당신을 당뇨병이 되는 확률을 3배로 만든다.』는 것이다.

또 브로콜리를 권하고 있다. 『브로콜리를 먹자. 브로콜리는 혈당에 대하여 놀라운 작용을 하는 미량원소 크롬을 넉넉하게 지닌 식품이다. 만약 당신이 타이프Ⅱ의 당뇨병이라면 크롬은 혈당의 제어(制御)에 유효하다. 당뇨약을 줄일 수 있고 인슐린이 필요없게 할는지 모른다. 그리고 당신의 포도당내성(耐性)이 경계선에 있을 경우 브로콜리의 크롬이 고쳐줄 것이다. 혈당치가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경우에도 크롬은 혈당치를 높여 정상화 시킬 것이다. 브로콜리 1컵에는 22마이크로그램의 크롬이 들어있는데 이는 크롬을 그다지 포함하고 있지 않는 다른 식품의 거의 10배에 해당한다.』

당뇨병 선고 이후로 내가 지속적으로 가장 많이 섭취한 식품은 양파와 브로콜리, 그리고 사과와 토마토다. 일년내내 먹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제철이거나 아니거나 나의 식탁에는 이들 당뇨병에 유효한 식품이 오른다.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을 겪으면서 지금은 베지테리언(Vegetarian)이 된 것 같은데 '베지테리언'을 일반적으로 「동물성 식품을 피하고 곡물, 콩류, 종실(種實)류, 야채, 과일 등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섭취하는 사람들」로 정의되어 있다. 그런데 '베지테리언' 가운데는 동물성식품을 일체 섭취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유제품(乳製品)이나 달걀을 섭취하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베지테리언'은 '야채만 섭취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한다. 그러므로 '베지테리언'을 '채식주의자'로 번역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한다.

어쨌거나 나는 지금 '베지테리언'이다. 당뇨병을 극복한 것도, 고혈압을 되돌린 것도, 심장판막증(폐쇄부전)을 수술 없이 정상생활이 가능하게 한 것도 따지고 보면 '베지테리언'이 되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 할 것이다.

고혈압을 겪은 일은 당뇨병보다 몇 년 앞선다. 70대 초반에 재정상태가 어려워져서 그런지 뒷목이 좀 뻣뻣하고 머리가 무겁길래 집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어보니 수축기(최고혈압)때 200선에 있었다. 의사는 두말없이 고혈압 진단과 함께 고혈압약 복용을 권했으나 나는 의사의 권고를 당장은 따르지 않았다. 혈압측정기를 사다가 집에서 재어보니 수축기는 170, 확장기(최저혈압)90선에서 내려가지 않았다. 이건 고혈압이다. 고혈압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 일이 벌어지기 전에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의사의 처방대로 혈압약 노바스크(5mg)를 3년동안 매일 1정씩 복용했다. 그러던 어느날 혈압약 복용이 갑자기 심란해졌다. 생각하기를 "혈압약은 한번 복용하기 시작하면 평생 계속해야 된다는게 정설(定說)처럼 되어 있지만 수상하다. 수상한 건 뒤집어야 되지 않겠나. 고혈압은 뭔가? 요컨대 심장의 전신에 피를 내보낼때 수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닌가. 그것은 피가 맑지 않다는 이야기일 수 있고, 손끝발끝의 모세혈관이 닫혀있다는 이야기 일 수도 있겠다. 끈적끈적한 피를 깨끗하고 맑게 바꿈으로써 심장이 힘들이지 않고도 피를 전신에 내보낼 수 있다면 혈압이 높을 수가 없지 않은가? 그리고 심장을 활성화시키면 혈압을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의가 들으면 웃을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 생각을 가다듬고, 그걸 믿게 되면 나는 바로 움직이는 행동파다. 나는 살아오면서 철석처럼 믿는 일을 어렵다든가, 불리하다는 이유로 안한 일은 없다. 믿으면 하는 것이다. 그날로 노바스크 복용을 중지하고 피를 맑게 하는 식생활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튿날 교보문고에서 산 일본서적 '혈액을 깨끗하게 하여 병을 고치는 책'(2006년 간행)은 지금도 애장서(愛藏書)로 지니고 있다. 원색판인 이 책은 피를 깨끗하게 하는 거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1.깨끗한 혈액이 생활습관병을 예방한다. 2.깨끗한 혈액인지 어떤지를 아는 방법 3.피를 깨끗하게 하여 혈관을 되젊게하는 일상생활의 개선법 4.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영양분 5.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최강의 식품 6.가볍게 움직여 피를 맑게 하는 운동법

피를 맑게 하는 최강의 식품은 1.아스파라거스 2.당근 3.피망 4.모로헤이야 5.양배추 6.버섯 7.양파 8.마늘 9.생강 10.고구마 11.미역 12.김 13.낫또(청국장) 14.사과 15.귤 16.메밀(류틴) 17.녹차 18.요구르트 19.올리브기름 20.식초

내가 하루 두 끼를 먹는 과채식(果菜食)식단은 거의 20가지 '피를 맑게 하는 식품' 속에 들어있다. 이외의 것은 토마토, 호박, 연뿌리, 바나나, 수박, 파인애플, 포도, 배, 감, 샐러리, 브로콜리, 우엉 등이다. 쌀밥은 주식에서 빠져있다. 아주 조금 먹는다. 하루 한 끼만 밥을 먹는데 그것도 보통 성인의 한 끼의 반 정도다. 탄수화물은 고구마속에도 들어있고 당질은 연뿌리에도 들어있다. 한마디로 인슐린을 아끼는 식단으로 보면 맞다. 혈압약 노바스크를 끊은 지 여러 해가 되지만 혈압상태는 아주 양호하다. 30~40대 젊었을 때보다 지금 혈압이 더 건강하다. 확장기(최저)혈압은 늘 75선이다. 수축기(최고)혈압은 120을 넘지 않는다. 대개는 115선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심장이 힘들어하지 않아도 피는 손끝 발끝을 돌아, 돌고도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헬스클럽에서 조깅머신을 타고 시속 5.6Km로 걸을 때 심장박동수는 100을 넘지 않는다. 대개 90중간선을 가리키는데 나보다 훨씬 젊은 사람의 심박수(나보다 느린 속도)는 110을 넘는 것을 곁눈질로 볼 수 있다. 병은 낫는다. 그 주제(主題)를 괜히 단 것은 아니다. 대가(代價)를 지불하면 병은 낫는다.

대가를 지불하면 병은 낫는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충전 중

한국수력원자력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쉬지 않고 에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물론 수력·양수 및 신재생 에너지까지
언제나 든든하게 충전해 주니까

대한민국, 오늘도 힘차게 움직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리더
한국수력원자력㈜

■ khnp.co.kr ■ facebook.com/ilovekhnp ■ blog.khnp.co.kr

'김영란 法' 언론 활동 위축우려 大韓言論人會 성명발표

대한언론인회는 지난 3월 4일 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은 위헌 소지가 있고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유도하는 장치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 공직자로 보기 어려운 언론인을 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권력기관이 언론을 한 묶음으로 묶어 정당한 취재와 보도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신문·통신·방송사는 보도라는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언론인 스스로 윤리강령 등을 통해 언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 기능은 부당한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침해받을 수 없는 언론 고유의 영역이다. 우리는 김영란법이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명분아래 언론의 자율 영역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언론 본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이 법을 시행에 앞서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5년 3월 4일 社團法人 大韓言論人會

사우회 소식

OB산악회 시산제

경향신문 경향신문사우회 OB산악회(회장 장 옥 · 본회 회우)는 지난 3월 7일 정오 북한산 기슭에서 이상호 정운종 최귀조 본회 이사 등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시산제를 올리고 안전산행을 기원했다.

동우 자선바자회 열어

동아일보 동아일보 사우회(회장 김태선)는 3월 20일자로 동우회보 41호를 발행했다.

동우 자선바자회 출연 물품 지상 전시(10-11면)가 돋보이는 이번호는 타블로이드 16면에 동우 산클럽(회장 성낙오·본보 편집위원장)시산제 소식(6면)과 '그때 그 시절 남은 이야기'(13면·안평선 회우), '동우 사진클럽 2015활동계획' 등 많은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동우회 산클럽 캐치프레이즈 백두산(백세까지 두발로 산에 오르자)'도 백두산 등정 계획 소식과 함께 눈길을 끈다.

동우회는 또한 오는 5월 12일 오전 11시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임시총회 겸 단합대회를 개최한다.

김소선 회장 선출

서울신문 서울신문사우회는 3월 12일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김소선씨를 선출했다. 김회장은 서울신문 총무이사와 흥사단 이사장을 지냈다.

회보 197호 발행

중앙매스컴 중앙매스컴 사우회(회장 김원태)는 2월 28일자로 사우회보 197호를 발행했다. 사우 일자리 창출, 복지기금 확충 등 사우회 2015년 활동계획을 머리기사로 하여 나온 이번호는 중산회 맛사랑, 판우회, 두월회, 청록회, J포토, 동부회, 큐사랑, Young-77, 칠철회, 중산회 OB, 이목회 등 각종 친목모임 소식이 다채롭게 실렸다. 3면 김건진 사우의 '반갑습니다'도 화제다.

사우회보 155호 발행

KBS KBS사우회(회장 전봉찬)는 3월 1일자로 회보 155호를 발행했다. 타블로이드 8면 컬러판으로 나온 이번호는 제14대 사우회 출범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하여 제14대 사우회장 취임사(2면), '살며 생각하며'(5면) 등이 돋보인다.

사우회보는 이밖에 오인모 사우의 동유럽여행기(6면), 이내수 사우의 '이야기 방송사'(7면), 특별기고 '오만과 겸손'(이규임 사우)등 많은 읽을거리를 선보였다.

한우회보 15호 발행

한국일보 한국일보사우회(회장 제재형)는 3월 16일자로 한우회보 15호를 발행했다. '한국일보 옛 명성 되찾을 것' 제하의 1면 머리기사가 돋보이는 이번호는 타블로이드 16면에 제재형 본회 고문의 한국일보 사우회 회장 연임 소식(1면)과 한우회 회장단-한국일보 승명호 회장 예방 간담회(2면), 정범태 본회 원로회우의 근황(3면), 기획연재 중학동시대-본회 홍순일 원로회우(글 이향숙 회우), 나의 특파원기(최해운·5면)등 다채로운 소식이 실렸다.

사우회보 28호 발행

MBC MBC사우회(회장 김수량)는 3월 15일자로 사우회보 28호를 발행했다. 2015년도 사우회 정기총회 소식(1면)을 1면 머리기사로 하여 사우회 창립 25주년 기획시리즈 '원로를 만나다'(6면), '그 시절 그 이야기'(2면), 회우들의 에세이 등이 실렸다.

마권수 4대 회장 추대

CBS CBS사우회는 2월 23일 총회에서 마권수(전 KBS해설위원) 본회회우를 4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마 회장은 72년 CBS 기자로 입사해 80년 KBS로 옮겨 해설위원 등을 거쳐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한바 있다. 현재는 송암 시스콤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대한언론인회 휴양시설 대명리조트 이용안내

주중 회원요금에 1만원추가
전국 11개지역… 가족도 혜택

흔들바위가 바라보이는 설악과 스키장이 있는 홍천 등 전국 11개 지역에 있는 대명콘도를 대한언론인회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본회 김은구 회장과 (주)대명레저산업의 안영혁 대표이사는 지난 1월 29일 '대명리조트 평일 객실 및 부대시설 이용 및 제공 협약서'를 체결, 이날부터 대한언론인회 회원과 가족들이 주중(평일)에 콘도객실과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합의한 것이다.

- **대상리조트** : 전국 11개지역 대명리조트
  (델피노, 비발디파크, 양평, 단양, 경주, 변산, 엠블호텔 킨텍스, 엠블호텔 여수, 솔비치, 거제, 제주)
- **이용대상** : 대한언론인회 회원
- **이용시기** : 주중 (일요일~목요일)
- **이용요금** : 객실-회원요금 +1만원 (지역별 요금 별첨)
  부대업장(스키월드, 오션월드, 아쿠아월드, 골프장, 사우나)-회원우대
- **이용방법** : 홈페이지 예약 www.daemyungresort.com
  전화예약 1588-5859
  ※ 예약할때는 고유번호 49131701을 알려 주고 이름을 대면된다.
- **회원권 분양문의** : 02-2222-8912

〈대명콘도이용 지역별 요금표〉

지역	구분	패밀리형(20평 내외)	스위트형(30평 내외)
델피노 (설악)	A동(구설악)	59,000원~69,000원	73,000원~84,000원
	B동(구금강)		
	C동		95,000원~106,000원
	D동		
	호텔	134,000원	
비발디 (홍천)	오크	59,000원~69,000원	73,000원~84,000원
	파인 메이플 체리	69,000원~79,000원	82,000원~93,000원
양평		59,000원~69,000원	73,000원~84,000원
단양		59,000원~69,000원	73,000원~84,000원
경주		79,000원	93,000원
거제		118,000원	137,000원
제주		91,000원	109,000원
변산	리조트	79,000원	93,000원
	호텔	90,000원	112,000원
솔비치 (양양)	리조트	89,000원	106,000원
	호텔	92,000원~114,000원	144,000원~172,000원
엠블호텔 (여수, 킨텍스)		142,100원~188,000원	175,000원~285,300원

혁신 과제

- 참여와 자치
- 거버넌스
- 자치공동체

자치

- 행정의 신뢰
- 자기 주도적 행정
- 업무협업
- 행정혁신 내재화

행정

3농

- 지속가능한 농어업
- 살기 좋은 농어촌
- 행복한 농어업인

행복 과제

- 충남경제발전비전
- 산업기반
- 신성장동력
- 문화, 관광콘텐츠산업

성장

환경

- 물 복지
- 쾌적한 도시
- 주거환경
- 기후변화
- 에너지
- 문화부흥

권리

- 안전
- 보육
- 평생교육
- 인권, 약자보호
- 응급의료
- 양성평등
- 체육

충남 도민행복 프로젝트

3대 혁신 과제와 3대 행복 과제로
도민이 행복한 충청남도를 열어가겠습니다!

행복충만 충청남도 충남도청 350-831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대표전화 (041)635-2000 대표팩스 (041)635-3000 홈페이지 www.chungnam.net

회 우 동 정 가나다순

'국민 놀래키지말라' 강연

남재희(전 노동부장관) 원로회우= 3월 23일 새정치연합 진보성향 초·재선 의원모임인 '더 좋은 미래연구소'에서 이른바 강경파 의원들을 향해 "야당에 돌발행동, 괜스레 돌발성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것을 피해야한다. 국민을 놀래키면 안된다"고 역설했다.

제14회 유관순賞 수상

박선영(전 국회의원)회우= 3월 20일 서울 이화여고 '유관순 기념관'에서 충청남도가 선정한 제14회 유관순상(賞)을 수상했다. 유관순상 수상자에게는 200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됐다.

'통일과 나눔 재단' 위원장

안병훈(기파랑 대표)회우= 지난 3월 12일 출범한 '통일과 나눔 재단' 설립 준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통일과 나눔 재단'(가칭)은 남북교류를 촉진하고 통일을 앞당기는 활동을 주목적으로 한 민간재단이다.

불교방송 시청자위원 연임

윤흥섭(전 MBC 홍콩특파원)회우= 최근 불교방송 시청자위원에 연임됐다.

한국 인성교육실천본부 대표총재

임덕규(디플로머시 회장·전 국회의원)회우= 3월 1일 대전광역시 효문화마을 대강당에서 열린 인성회복국민운동 발대식에서 축사. 임 회우는 또한 이 발대식에서 대표총재로 추대됐다.

고려대 교우회 상임이사

임학수(전 동아일보 사장실 기획위원)원로회우= 지난 3월 1일 고려대 교우회 제 31대 상임이사로 선임됐다.

우남탄신 140주년 기념식 주관

제재형(한국일보 사우회장)본회 고문= 3월 26일 '건국대통령 우남 이승만박사 탄신 제140주년 기념식'을 주관했다. 기념사업회 상임이사로 있는 제재형 고문이 주관한 이 행사는 축하기도와 찬양 그리고 '십자가의 건국정신'이란 강연도 있었다.

3개 신문에 칼럼 연재

천상기(경기대 초빙교수)회우= 가판 민주신문에 '천상기 교수 민주시평'과 인터넷 일간신문 Ndaily News 논설고문으로 '천교수의 세상보기', 소비경제신문 상임고문으로 소비자 고발코너' 등 3개 신문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신경식 본회 자문위원, 헌정회 회장 당선

본회 자문위원인 신경식 회우가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에 당선됐다.

신 회우는 3월 24일에 있은 헌정회 정기총회에서 608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73%인 445표를 얻어 임기 2년의 회장에 선출됐다.

"헌정회를 대한민국 헌법과 정통성을 확고히 지키는 보루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힌 신경식 회장은 대한일보 정치부장을 거쳐 충북 청원에서 내리 네 번(13-16대)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정무장관을 역임했다.

4월 건강포럼 '힐링' 강의

개나리 활짝 핀 봄날 토요일 오후 2시 '웃음 힐링' 전문 여강사와 함께 하세요.

* **제목** : '마음을 사로잡는 테크닉'
* **일시** : 4월18일 (토) 오후 2시부터
* **강사** : 레시피발전소 김인숙 실장
* **장소** : 이윤수 비뇨기과 홀 (을지로 입구)
* **문의** : 이보길 회원사업위원장 (010-4461-5657)

춘계 바둑 모임 안내

대한언론인회 기우회의 봄철 바둑 모임을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합니다.
이번 모임은 시상을 위한 대국이 아니고 회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참가로 급수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회우와 친선 대국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 하셔서 수담 (手談)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5년 4월 24일 (금) 오후 2시
* **장소** : 바둑 세계기원 (종로 3가 국일관 뒤편)

신입회우 환영합니다

이기종(李基鍾) 1948년 6월 19일생
주소 : 서울 동작구 동작동 이수교 KCC스위첸아파트 105-401호
전화 : 595-1213 010-5217-3303
〈약력〉
경향신문 제2사회부기자(75), 스포츠서울 연예부장(95), 스포츠서울 편집국장(2000), 제작본부장(2011)

본회 이사회 수입감소 대책논의

제145차 이사회가 3월 19일 본회 사무실에서 열려 예상되는 수입 감소에 따른 대책 등을 협의했다.

주 재원인 기금이자율이 1%대로 내렸고 광고수입도 전반적인 광고시장 위축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긴축방안을 내도록 했다.

약 3천여만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살림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우선 회장 업무추진비(연 6백만 원) 항목을 1년간 삭감했고 상임이사 수당(연 120만원)도 반납키로 했으며 각종사업도 경비절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또 인터넷신문 창간 계획을 예산관계상 보류키로 하고 회원수첩발간은 정부당국의 8월중 새 우편번호부여 등 변동사항이 많아 금년엔 발간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작년도 수첩발간 이후 가입한 회원과 변동된 주소 및 전화번호를 7월 1일자 회보에 실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총회에서 결정한 고희연 폐지, 팔순연 신설 문제는 금년에 8순(만 80세)이 되는 회우 중 고희 때 축하금(금반지 포함)을 받은 회원을 제외하고 신입 팔순회원에게만 적정한 축의금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체력단련, 문화탐방(한국언론진흥재단 사업포함), '못다한 이야기 5집 발간, 대한언론상 등 기존의 사업과 후생복지사업은 종전대로 계속된다.

이사회는 이밖에 새 사업으로 대한언론인회의 지역조직을 신설하되 시범적으로 지역을 선정, 운영하고 신규사업도 발굴해서 새로운 면모의 대한언론인회가 되도록 했다.

각 언론사에 협조 공문

대한언론인회 김은구 회장은 지난 3월 13일자로 각 언론사 대표에게 '대한언론'에 대한 광고협찬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각 언론사 퇴직 언론인 모임인 대한언론인회가 이 같은 협조공문을 보낸 것은 그동안 일부 언론사만이 대한언론에 광고를 게재 해 온데 따른 것으로 오랜 역사(1977년 창립)를 가진 대한언론인회에 대한 각 언론사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범 언론사 차원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김은구 회장은 또한 각 언론사 사우회장에게 각사 퇴직 언론인들이 본회회원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해 달라는 서신을 보낸바 있다.

◀ 주 소 변 경 ▶

구본건 원로회우=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08-4 호암빌딩 8층 무지개 너싱홈
임응식 회우=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로 19길 8-11 암사파크빌 301호 (우 134-855)

입회비 ·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괄호 안 숫자는 납입연도, 2015년 2월 27일 부터 3월 30일까지)

〈연회비〉
고귀남(15) 구월환(14.15) 김정삼(15) 김창구(15) 문준철(15) 민병문(15) 신광식(14.15) 안광식(15) 안종화(15) 유자효(14) 은종일(15) 이문조(15) 이민희(15) 이영일(15) 이욱용(15) 이재원(15) 임현태(15.16) 전신병(15) 정서구(15) 조남조(14.15)

협찬금
이광영 논설위원 500,000원

회우경조사

결 혼

김승웅 회우= 3월 14일(토) 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 옆 후생관에서 차남 결혼
김종열 회우= 1월 17일(토) 오후 1시, 더플라자호텔 22층 지스텀하우스에서 차녀 결혼
박연호 회우= 4월 4일(토) 낮 1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장남 결혼

月刊 大韓言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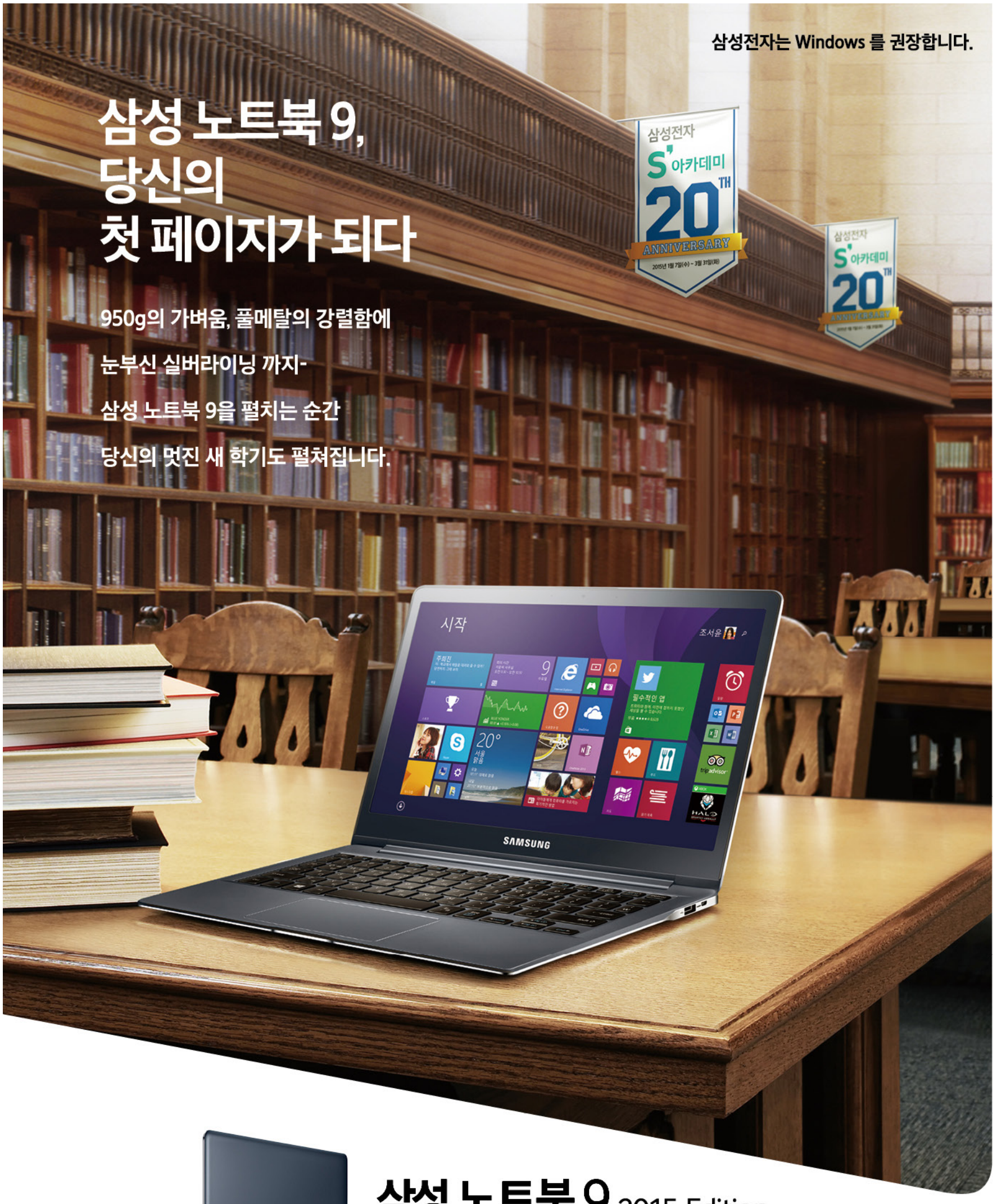
· 발행인 겸 편집인 金銀九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대외협력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따뜻한마음
2014 인터넷윤리대전 인쇄광고부문 SK커뮤니케이션즈 사장상 수상작품
ⓒ 유진우

아름다운 인터넷의 시작은
따뜻한 마음으로부터-

서로가 보이지 않는 인터넷 공간이지만,
사람과 사람이,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곳입니다.
작은 댓글 하나도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면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삼성 노트북 9 2015 Edition

- 950g 초경량, 11.8mm 초슬림, 30.9cm 컴팩트 사이즈
- 풀메탈 바디, 실버라이닝으로 빛나는 디자인
- 최신 인텔 코어 M 프로세서, SSD 탑재로 빠른 작업 속도
- WQXGA 초고해상도, 광시야각으로 선명한 화면

삼성전자 S' 아카데미 20th 스무살의 아카데미가 모두의 아카데미로!

삼성전자의 최신 IT제품을 다양한 혜택과 함께 만나보세요.(1/7~3/31) ▶ 자세한 내용은 www.s-academy.co.kr 을 참조하세요.

업무는 완벽하게. 여가는 즐겁게. Windows

삼성전자 SAMSUNG